

민선7기 공약이행점검을 위한

2020 경상남도 도민공약평가단 회의 운영 결과 보고서

2020. 12.



경 상 남 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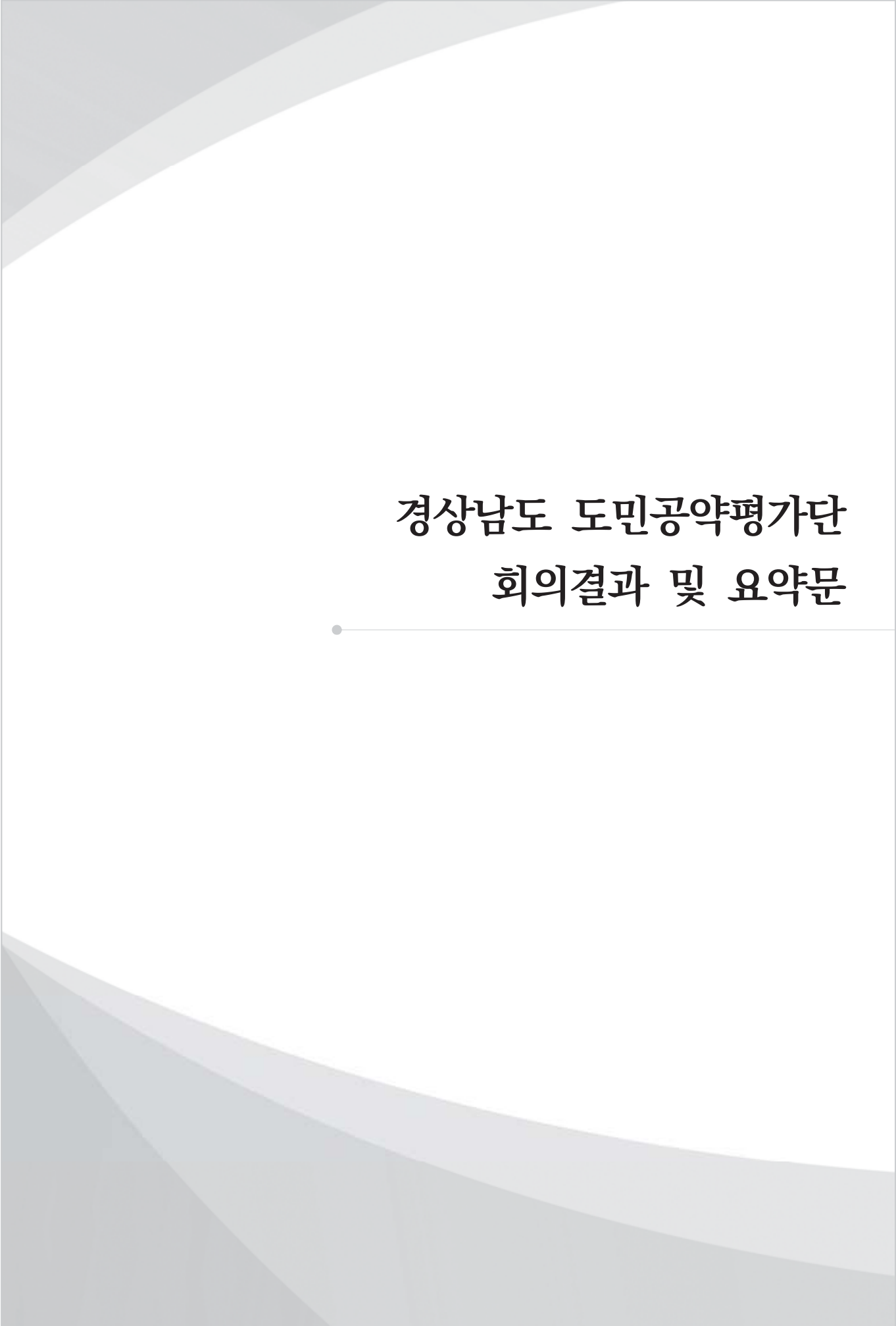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내 용 목 차



2020 경상남도 도민공약평가단 회의결과 및 요약문	3
1. 회의 개요	3
2. 추진방향 및 진행과정	4
가. 추진방향	4
나. 진행과정	5
3. 심의 안건에 대한 최종 결과	7
가. 공약 조정 승인요청에 대한 최종 투표 결과	7
 제1장 들어가며	11
1. 경상남도 도민공약평가단 운영 배경	11
2. 도민공약평가단 운영 목적 및 방향	12
3. 도민공약평가단 운영 개요	14
가. 추진방향	14
나. 도민공약평가단 회의 개요	15
다. 심의 안건 선정 및 심의 방법	15
 제2장 도민공약평가단 운영 절차	19
1. 도민공약평가단 운영 기조 및 흐름	19
2. 도민공약평가단 운영 지원 조직	21
3. 도민공약평가단 모집 절차	22
4. 도민공약평가단 예비회의 및 본회의	26
 제3장 도민공약평가단 운영 결과	33
가. 공약 조정 승인요청에 대한 최종 투표 결과	33

2. 분임별 안건 설명 및 질의응답	35
가. 1분임	36
나. 2분임	43
다. 3분임	53
라. 4분임	59
마. 5분임	73
3. 분임별 토의 내용 및 결과	82
가. 1분임	82
나. 2분임	88
다. 3분임	94
라. 4분임	99
마. 5분임	108
 제4장 도민공약평가단 활동 후기	 117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121
 부록	 125
1. 1차 회의 교육자료	125
2. 3차 회의 교육자료	141



경상남도 도민공약평가단 회의결과 및 요약문

2020 경상남도 도민공약평가단 회의결과 및 요약문

(2020년 12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2018년 7월부터 시작된 민선7기 단체장의 공약 이행 과정에서 직접 주민들이 참여하여 조정공약에 대한 변경 적정여부를 심의하기 위해 도민공약평가단 회의를 운영함. 공약실천에 대한 평가 및 환류 과정에서 소수 전문가 위주 행정참여를 개선하여 지역의 문제를 가장 가까이서 체감하고 있는 주민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정책공약과 그 집행의 불일치를 해소하고자 하였음.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주관으로 인구비례에 의한 무작위 추첨을 통해 도민공약평가단을 구성함. 1차 및 2차 예비회의에서 배심원 교육과 공약사업 설명회 등을 실시하였고, 3차 본회의에서 안건에 대한 토의 및 의결 절차를 거쳐서 회의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였음.

이에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평가단 심의 결과 및 의견을 경상남도에 전달하고, 2021년 1~2월 내에 심의 결과 공포와 도민공약평가단 의견 수용여부 공시를 제안함.

1. 회의 개요

- 회의명 : 민선7기 공약이행 점검을 위한 2020 경상남도 도민공약평가단 회의
- 기간 : 2020년 10월 20일(화), 11월 3일(화), 11월 17일(화)
- 대상 : 경상남도 거주 만 18세 이상 주민
- 인원 : 도민공약평가단 31명
- 구성방법 : 성별 · 연령 · 지역을 고려한 무작위 선발
- 주최 · 주관 : 경상남도 ·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 심의내용 : 민선7기 경상남도지사 공약 조정 적정여부 심의 (12건)

■ 회의목적

- 2018년 7월부터 시작된 민선7기 단체장 공약 이행 과정에서 일부 조정 공약에 대하여 주민들이 직접 적정성을 심의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함.
- 공약이해 점검에 지역 주민들이 직접 참여함으로써 정책공약과 집행의 불일치를 해소하고 최적의 공공재 생산을 지향함.
- 소수 전문가 위주의 행정참여를 개선하여 지역의 문제를 가장 가까이에서 체감하고 있는 주민들의 참여와 심의를 보장함.
- 사회적 차별과 배제를 받고 있는 이웃을 위한 공약의 면밀하게 검토하고, 사익과 공공성 간의 균형과 조화를 통하여 지역의 비전을 모색함.
- 공약조정에 대한 적정 여부를 심의하기 위해 정책전문가와 지역 주민들이 협업하는 과정으로 도민공약평가단 회의를 운영함으로써 신뢰형정 발굴과 확산, 주민소통의 새로운 방향 제시, 성숙한 지방자치와 민주시민의식 고양에 이바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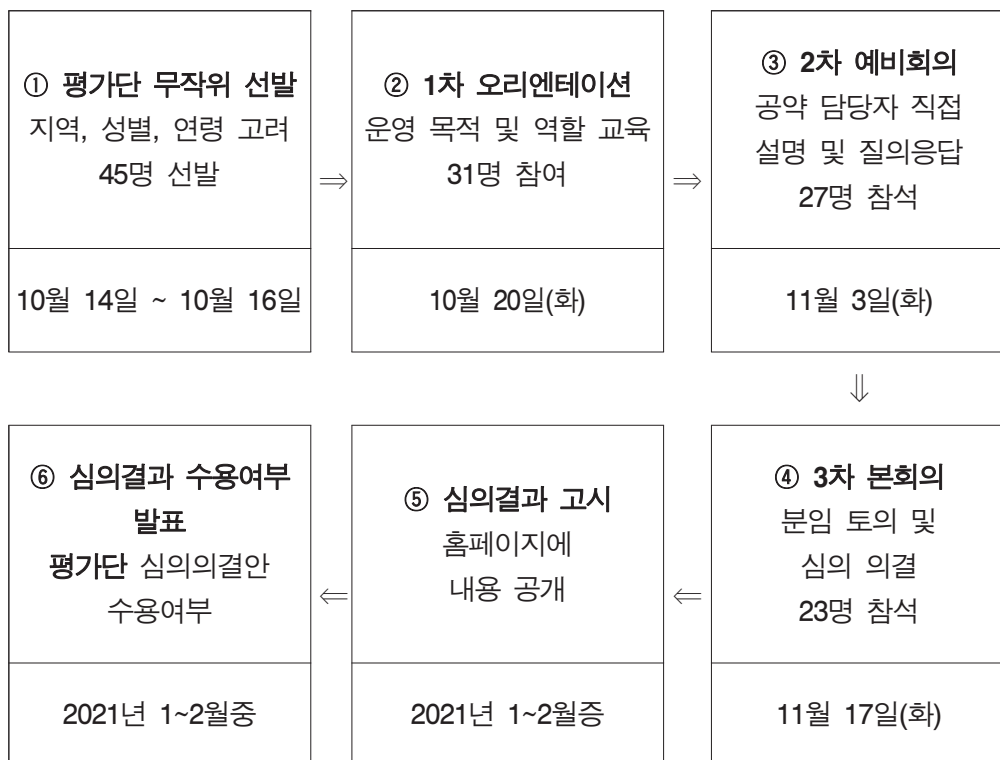
2. 추진방향 및 진행과정

가. 추진방향

- 민주적이고 공정한 심의를 위하여 지역별·성별·연령별 인구비례에 따른 무작위 추첨으로 도민공약평가단을 선발하여 주민의 대표성과 참여 기회 평등성을 확보함.
- 최종 선발을 거쳐서 회의에 참여하는 도민공약평가단은 주민의 대표성을 가지고 민선7기 경상남도지사 공약 조정에 대한 최종 승인여부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함.
- 비교적 단순하고 피상적인 의견수렴과 고정된 선호의 단순 취합이라는 기존의 여론조사 방식이 아닌 학습과 토론을 통한 신중한 의사결정과 선호변경이 가능한 공론조사 방식의 토의 과정을 채택함.

- 도민공약평가단의 심도 있는 토의를 위하여 지자체 공약담당자는 심의 안전(정책공약)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함.
- 운영관리에 있어서 모든 절차는 민주적 절차에 의하여 도민공약평가단 스스로 운영하여 나가도록 유도함.
- 또한 원활한 토의 진행을 돕기 위해 분임별 촉진자(facilitator)도 함께 참여하고, 현장실무경험과 전문성이 있는 시민사회 활동가로 구성함.
- 도민공약평가단 논의 결과와 이에 대한 경상남도의 수용 여부는 일정 기간 동안 경상남도 홈페이지에 공시토록 함.

나. 진행과정



■ 도민공약평가단 무작위 선발

- 사회여론조사연구소 ARS를 통하여 1차 470명의 응답자 추출, 2차 전화 면접을 거쳐 최종 45명 선발

■ 1차 예비회의 및 교육 (경남도청 대강당) : 10/20(화) 14:00~17:00

- 매니페스토 운동과 도민공약평가단에 대한 교육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 주민참여와 숙의민주주의에 대한 이해
 - 지역현황, 단체장 철학과 그에 따른 핵심정책기조
 - 도민공약평가단 운영 목적, 운영개요, 역할 등
- 5개 분임 구성 및 분임별 토의 (분임별 촉진자 각 1명 참여)
 - 도민공약평가단 역할 및 향후 일정 안내, 분임별 다짐 공유 및 발표

■ 2차 예비회의 (경남도청 대회의실) : 11/3(화) 14:00~17:00

- 공약 안전 설명회 (주관부서 ⇔ 도민공약평가단)
 - 분임별 배분된 사업 담당자가 직접 설명, 평가단 질의에 대해 답변
 - 설명 종료 후 도민공약평가단 자유 토의

■ 3차 회의 (경남도청 대회의실) : 11/17(화) 14:00~17:00

- 분임토의
 - 분임별 소관 안전에 대한 토의 및 의견 정리
 - 분임별 공약 조정 적정여부 심의 : 찬반토의 및 찬반의견 집계
- 전체회의
 - 분임별 회의 결과 발표 및 질의응답
 - 공약 조정 적정여부 심의 : 전체 도민공약평가단 투표로 최종 승인 여부 결정 (과반 찬성 시 승인)

3. 심의 안건에 대한 최종 결과

가. 공약 조정 승인요청에 대한 최종 투표 결과

■ 총 12개의 공약 조정 승인 요청에 대한 투표 결과 12개 안건이 도민공약 평가단 과반 찬성으로 승인되었음.

투표 총 인원: 28 (명)

분임명	연 번	토 의 안 건	투표결과	
			승인	미승인
경수야 단디해라 (1분임)	1	동북아 물류 플랫폼 구축 ※ 예산·추진개요 변경	19	4
			기권:	0
	2	청소년 근로조건 지킴이 ※ 공약명·목표 변경	17	6
			기권:	0
오늘이 곧 미래다 (2분임)	3	항공ICT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 ※ 예산·목표 변경	20	3
			기권:	0
	4	부산경남청년창업사관학교 분리 유치 ※ 목표 변경	16	7
			기권:	0
인륜지대 본 (3분임)	5	청년 취농인턴제·취농직불제 및 경영실습임대농장 조성 ※ 공약명·예산·목표 변경	15	8
			기권:	0
	6	경남농어업특별위원회 및 농어업회의소 설치 ※ 공약명·예산·목표변경	18	5
			기권:	0

분임명	연 번	토 의 안 건	투표결과	
			승인	미승인
가야 (4분임)	7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복지 확대 ※ 예산·계획 변경	19	4
			기권:	0
	8	임플란트·틀니, 관절수술,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 지원 ※ 공약명·목표·내용 변경	16	7
			기권:	0
	9	어르신센터 설치 ※ 목표·예산 변경	17	6
			기권:	0
맘 편한 경남 (5분임)	10	경남‘맘 편한’ 원스톱 보육센터 설치 ※ 목표·예산 변경	19	3
			기권:	1
	11	경남 공공산후조리원 권역별 설치 ※ 목표 변경	14	8
			기권:	1
	12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 목표·예산변경	19	3
			기권:	1

<끝>

제1장 들어가며



제1장 들어가며

1. 경상남도 도민공약평가단 운영 배경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2018년 7월부터 시작된 민선7기 단체장 공약이행 과정에서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 이를 점검하기 위하여 도민공약평가단 회의를 운영할 것을 제안하였다. 공약실천계획의 수립 주체가 대부분의 경우 소수 전문가라는 점에서 선거에서 단체장과의 직접적 계약 주체인 주민들의 체감성이 떨어진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고, 따라서 계획 수립 및 이행에서 주민들이 참여하여 숙의하는 과정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이에 따라 도민공약평가단 회의가 제안된 것이다.

이에 경상남도는 공약의 주인인 주민들이 심사숙고의 과정을 거쳐 심의의견을 작성하고 이를 토대로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가는 도민공약평가단의 운영을 실시하게 되었다. 기존의 공모 형식 주민 참여 모델은 정보접근성이 수월하고 참여 경험 많은 주민들로 실질 참여 범위가 한정되는 경우가 많아 대다수의 주민에게는 그 기회가 제한되어 있고 주민의 대표성과 공정성을 담보하는데서 많은 제약이 따랐다. 그러므로 주민 참여 기회와 폭을 넓히고 심의 결과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도민공약평가단 구성에 있어서 인구비례에 의한 무작위 선발은 타당한 기제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도민공약평가단 운영은 경상남도 주민과 지자체가 직접 교감하여 민선7기 공약실천의 기조와 방향을 설정함은 물론, 공약이행 과정에서 신뢰행정의 모델을 발굴·확산시킴으로써 주민소통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건강한 지방자치와 성숙한 민주주의를 한 단계 발전시켜 나가고자 하는데도 그 목적이 있다. 또한 지역 주민들의 참여를 통해 정책공약과 그 집행의 불일치를 해소하고자 하는 노력이기도 하다.

2. 도민공약평가단 운영 목적 및 방향

민선5기부터 공약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제안으로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은 본격적으로 공약실천계획서(공약실천매뉴얼)를 작성하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여전히 계획이 전문가 위주로 수립됨에 따라서 참여 행정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이 떨어지고 주민들의 지방자치에 대한 참여가 제약될 수밖에 없었다. 또한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여 생활자치 실현이라는 지방자치의 본래 목적이 소홀히 다뤄질 수 있다는 문제점이 상존하였다.

이러한 기존의 공약실천계획서 작성과 확정, 이행과정에서 주민 참여 배제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경상남도는 도민공약평가단 회의를 통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하였다. 도민공약평가단의 심의는 공약의 조정 적정여부 심의와 이행 평가 및 개선방안 마련을 내용으로 하였다. 주민들의 참여와 의사결정의 질적 향상을 위해 인구비례에 의한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발된 도민공약평가단의 학습 및 토의과정을 거쳐서 결과를 도출하는 민주적 과정을 거쳤다.

우선, 도민공약평가단 선발에 있어서 지역의 문제를 가장 가까이서 체감하고 있는 주민들의 참여와 주민 전체의 참여기회의 평등성, 그리고 주민 대표성 및 심의 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거주 만 19세 이상 주민을 대상으로 인구비례(지역·연령·성별)에 의한 무작위로 도민공약평가단을 선발하였다. 또한 심의 결과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단체장과 친인척 관계에 있거나 현재 공무원으로 근무 중인 주민, 그리고 정당의 당직자는 선발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인구비례에 의하여 무작위로 선발된 도민공약평가단을 대상으로 평가단의 권한과 임무에 대한 교육과 공약실천계획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여 주민들 스스로 공약실천계획의 실효성 및 실현가능성에 대한 토의가 가능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였으며, 장기적으로는 주민과의 소통·공감을 통해

신뢰행정을 발굴하고 확산시키고자 하였다. 또한 과거의 낙수형 방식의 일방적 주민소통 방식을 개선하고 직접민주주의 원형인 아테네 민주주의 방식을 차용함으로써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주민소통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아울러 참다운 지방자치와 성숙한 민주주의 실현을 목표로 도민공약평가단 운영 방향을 설계하였다.

3. 도민공약평가단 운영 개요

가. 추진방향

- 첫째, 민주적이고 공정한 심의를 위하여 지역·성별·연령 인구비례에 따른 무작위 추첨으로 도민공약평가단을 선발해 주민대표성과 참여 기회 평등성을 확보하였다.
- 둘째, 최종 선발을 거쳐 회의에 참여하는 도민공약평가단은 주민 대표성을 가지고 공약 조정 안전에 대하여 최종 승인 여부 투표권을 행사하고 이행상황에 대하여 평가하며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지위를 부여하였다.
- 셋째, 전문가 중심의 공약 이행 과정을 개선하여 지역의 문제를 가장 가까이에서 체감하고 있는 주민들의 참여와 토의과정을 통하여 공약 이행을 점검하였다.
- 넷째, 비교적 단순하고 피상적인 의견수렴과 고정된 선호의 단순 취합이라는 기존의 여론조사 방식이 아닌 학습과 토론을 통한 신중한 의사결정과 선호변경이 가능한 공론조사 방식의 토의 과정을 거쳤다.
- 다섯째, 도민공약평가단의 심도 있는 토의를 위하여 심의 안전(정책공약)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운영관리에 있어서 모든 절차는 민주적 절차에 의하며 도민공약평가단이 스스로 운영하여 나가도록 유도하였다.
- 여섯째, 원활한 토의 진행을 위해 전문가 및 시민단체 활동가로 구성된 촉진자(facilitator)도 함께 참여하였고, 도민공약평가단의 논의 결과와 지자체 수용 여부는 일정기간 경남도청 홈페이지에 공시하도록 하였다.

나. 도민공약평가단 회의 개요

- 회의일자 : 2020년 10월 20일(화), 11월 3일(화), 11월 17일(화)
- 대상 : 경상남도 거주 만 18세 이상 주민
- 인원 : 도민공약평가단 31명
- 구성방법 : 성별 · 연령 · 지역을 고려한 무작위 선발
- 주최 · 주관 : 경상남도 ·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 심의범위 : 민선7기 경상남도지사 공약 조정 적정 여부 심의 (12건)

다. 심의 안건 선정 및 심의 방법

- 공약 조정 안건으로, 대내외적 여건에 따른 조정이 필요한 공약 12개를 심의 안건으로 제출하였다.
- 심의 절차는 국회 본회의 운영 방식을 차용하였다. 우선 5개 분임(소위원회)을 구성하여 분임별로 안건을 배분하였다. 공약 설명회, 분임 현장 조사 활동, 심층 분임토의를 통하여 공약 조정 안건에 대한 적정 여부 심의 및 개선방안 마련이 이루어졌다. 분임토의에서 마련된 심의 의견은 전체회의에서 도민공약평가단 전원에게 보고되었고, 평가단 전체 투표 및 동의를 거쳐 최종 승인 여부를 결정하였다.

제2장

도민공약평가단 운영 절차

제2장 도민공약평가단 운영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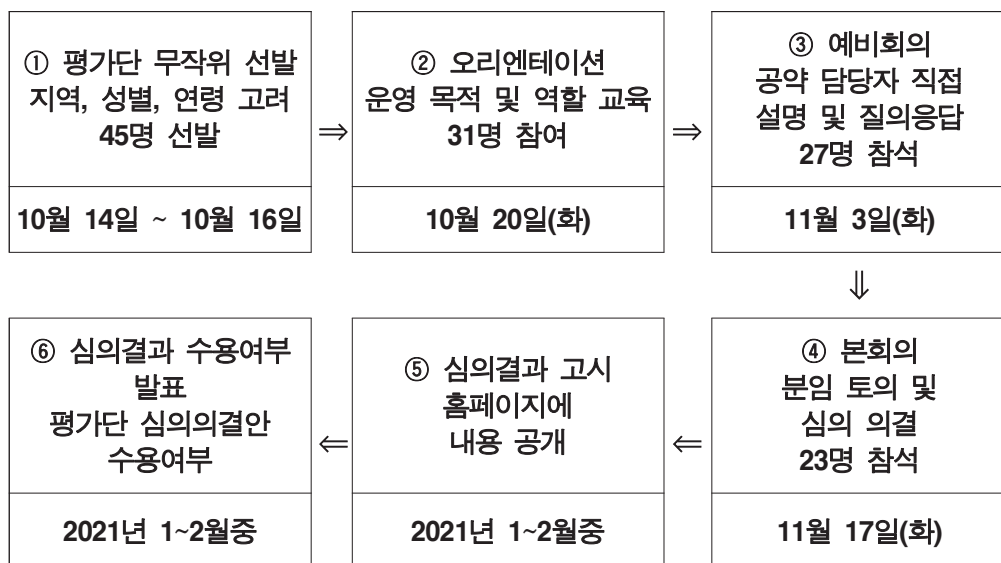
1. 도민공약평가단 운영 기조 및 흐름

■ 숙의적 의사결정을 위한 도민공약평가단 5대 주요사업

- 민주성·공정성에 기반을 둔 참여형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협력적 네트워크 다양화를 모색하며 아래로부터의 공감과 신뢰 행정 기운을 조성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단계적으로 추진하였다.

도민공약평가단 단 선발	기초교육 심화교육	분임 활동	토의, 결정	결과 수용 주민공시
- 사업 협약 - ARS 모집 - 전화 면접 - 도민공약평가단 확정	- 지역의 이해 - 매니페스토 운동 및 도민공약평가단에 대한 이해 - 공약에 대한 학습과 이해	- 분임별 평가활동	- 분임 토의 - 전체 회의 - 심의 의결	- 심의결과 공시 - 결과수용 - 결과공시

■ 도민공약평가단 진행과정의 흐름



- 공약설명회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균형 잡힌 정보 제공을 유도하고 토의 및 합의 과정에서 공정하고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와 촉진자가 중심이 되어 회의를 진행하였다.

■ 도민공약평가단 운영 일정 및 주요내용

구 분	일시 및 장소	주 요 내 용
1차 회의	10.20.(화) 14:00~17:00 (경남도청 대강당) ▶ 신관1층	○ 위촉장 수여 ○ 매니페스토 운동과 도민공약평가단에 대한 교육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 주민참여와 숙의민주주의에 대한 이해 - 지역현황, 단체장 철학과 그에 따른 핵심정책기조 - 도민공약평가단 운영 목적, 운영개요, 역할 등 ○ 5개 분임 구성 및 분임별 토의(분임별 촉진자 각 1명 참여) - 참석자 마음열기 (아이스 브레이킹) - 도민공약평가단 역할 및 향후 일정 안내, 분임별 다짐 공유 및 발표
2차 회의	11.3.(화) 14:00~17:00 (경남도청 대회의실) ▶ 본관4층	○ 공약 안건 설명회 (주관부서 ⇄ 도민공약평가단) - 분임별로 배분된 사업 담당자가 직접 설명, 도민공약평가단 질의에 대해 답변 - 설명 종료 후 도민공약평가단 자유 토의
분임 활동	11.4.~11.16.	▶ (필요할 경우) 주관 부서 담당자와 심층 면담 및 현장방문 활동 등 진행
3차 회의	11.17.(화) 14:00~17:00 (경남도청 대회의실) ▶ 본관4층	○ 분임토의 - 분임별 소관 안건에 대한 토의 및 의견 정리 - 분임별 공약 조정 적정여부 심의 : 찬반토의 및 찬반의견 집계 - 분임별 공약이행 평가 : 공약의 장점, 문제점 검토 및 개선방안 마련 (분임참석자 과반 이상 찬성으로 권고안 채택) ○ 전체회의 - 분임별 회의 결과 발표 및 질의응답 - 공약 조정 적정여부 심의 : 전체 도민공약평가단 투표로 최종 승인 여부 결정 (과반수 이상 찬성 시 승인) - 공약이행 평가 : 전체 도민공약평가단 합의로 분임권고안 최종 승인

2. 도민공약평가단 운영 지원 조직

■ 도민공약평가단 분임별 촉진자

- 분임별 촉진자는 도민공약평가단 회의 기획 및 운영을 위해 구성된 활동가 조직이다. 촉진자는 주로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활동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경험이 있으며 지역 활동에 대한 현장실무 경험에 있는 활동가 및 전문가로 구성하였다.
- 촉진자는 활동 과정에서 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의견을 제시할 수 없으며, 회의 구성원들의 적극적인 회의참여를 유도하고 원활한 토의를 위한 진행자 및 공약 이해도를 높여주기 위한 조력자 역할을 담당한다.
- 촉진자 구성
 - 조현배 인터넷신문 뉴스토리 편집국장
 - 류병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운영위원
 - 정현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청년활동가
 - 류일환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정책자문위원
 - 이밝음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조직팀장
- 촉진자 준비 사항
 - 도민공약평가단 운영 관련사항 점검 및 토의
 - 회의 안전지 작성, 심의 안전 검토

■ 도민공약평가단 지원 스텝

- 평가단 회의에 대한 운영지원 업무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처와 경남도청 정책기획관실에서 담당하였다.
- 지원스텝 회의
 - 도민공약평가단 전화 모집
 - 도민공약평가단 회의 준비, 진행

3. 도민공약평가단 모집 절차

■ 1차 모집 (ARS를 통한 무작위 추출)

- 경상남도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9월 2일부터 7일까지 6일간 유선전화 ARS를 통해 470명의 1차 도민공약평가단 모집
- 모집 및 선정방법
 - ARS를 통해 성별, 나이, 지역을 고려 무작위 추출, 참여 희망자 조사

구분	성별	나이	지역	1차 선발
고려 사항	성별 동수	10,20,30,40,50, 60대 이상	지역별 인구 비례로 선발	참여의향을 밝힌 도민공약평가단 선발

- ARS 모집을 위한 안내 내용

안녕하세요? 경상남도는 매니페스토본부와 함께 경상남도지사 공약이행 점검을 위한 도민공약평가단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도민공약평가단으로 지원하시면 10월 20일, 11월 3일, 11월 17일 총 3회에 걸쳐 경상남도지사 공약이행 점검 회의에 참석하게 되며, 참석하신 분에게는 소정의 수고비를 드립니다. 도민공약평가단에 참여하실 의사가 없으시면 전화를 끊어주세요. 그럼 도민공약평가단 등록을 위해 몇 가지 여쭙어보겠습니다.

[연령] 문1. 먼저 선생님의 연령대가 만19세 미만이면 ①번, 만19세 이상 20대면 ②번, 30대면 ③번, 40대면 ④번, 50대면 ⑤번, 60세 이상이면 ⑥번을 눌러주십시오.

[성별] 문2. 선생님의 성별이 남성이라면 ①번, 여성이라면 ②번을 눌러주십시오.

[휴대전화번호] 문3. 감사합니다. 자세한 일정 및 행사 안내를 위해 선생님께 직접 전화를 드리고자 합니다. 선생님의 휴대전화 번호와 우물정자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료 멘트]
 **[조사제외대상]
 ***[할당완료]

* 다시 한 번 질문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배심원 최종 확정 여부는 직접 전화 드리고 안내하겠습니다.
 ** 죄송합니다. 귀하께서 조사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죄송합니다. 표본할당이 완료되어 귀하께서 더 이상 조사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 2차 모집 (전화 면접)

- ARS를 통하여 참여 의사를 밝힌 주민 470명을 대상으로 9월 7일부터 9월 14일까지 8일 간 전화 면접을 거쳐 최종 위원단 45명 선발
- 선발 기준은 인구비례에 의해 이해도와 참여도가 높은 주민을 우선적으로 선발하였음
- 단체장의 직계 가족과 정당의 주요 당직자, (현)공무원, 전현직 선출직 공직자는 제외하였음.
- 전화면접 주요 내용

안녕하세요? 며칠 전 ARS 전화를 통해 경상남도지사 공약이행현황 점검을 위한 도민공약평가단 회의 참여를 희망하셨는데요. 도민공약평가단 회의에 참석이 가능하신지 다시 한 번 여쭙보려고 전화 드렸습니다.

(심의내용 : 공약이행현황 조정승인 / 개선방안 의견 수렴)

도민공약평가단 회의는 총 3회에 걸쳐서 진행됩니다.

첫 회의인 1차 회의는 10월 20일 화요일 오후 2시에,

2차 회의는 11월 3일 화요일 오후 2시에, 3차 회의는 11월 17일 화요일 오후 2시 진행됩니다.

※ 한 회의 당 소요시간은 약 3-4시간

※ 1차 또는 2차 회의에 불참한 경우 3차 회의 참여 불가
그리고 소정의 회의비도 지급할 예정입니다.

참석가능하신지요?

[확인 질문 1] 경상남도지사와 친인척관계이시거나 공공기관의 공무원, 또는 정당 주요 당직자로 근무하고 계신지요?

(前 선출직 공직자 출신의 경우도 제외함. 전 지방의원, 전 국회의원, 전 지자체 단체장, 전 대통령 등)

→ ('그렇다고' 대답한 경우)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위해 도민공약평가단으로 참여할 수 없음을 공손하게 알림.

→ ('그렇지 않다'고 대답한 경우) 네, 선생님은 경상남도지사 공약이행현황 점검을 위한 도민공약평가단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확인 질문 2]

- 이름

- 연령대

- 살고계신 지역 (경상남도 ○○동)

감사합니다.

앞으로 회의 전에 몇 번의 문자로 일정을 재차 안내하겠습니다. 혹시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여를 못하실 경우에는 현재 핸드폰에 찍힌 번호로 꼭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도민공약평가단단 (45명 선발)

○ 연령별 선발된 도민공약평가단단 수

연령	선발인원
20대	7
30대	6
40대	7
50대	12
60대 이상	13
계	45

○ 성별 선발된 도민공약평가단단 수

성별	선발인원
남	28
여	17
계	45

○ 지역별 선발된 도민공약평가단단 수

지역	선발인원	지역	선발인원
창원시	15	양산시	2
진주시	5	의령군	1
통영시	2	함안군	1
사천시	1	창녕군	2
김해시	5	고성군	1
밀양시	1	남해군	2
거제시	2	하동군	1

산청군	1		
함양군	1		
거창군	1		
합천군	1	계	45

4. 도민공약평가단 예비회의 및 본회의

■ 1차 예비회의 및 도민공약평가단단 최종 확정

- 일시 및 장소 : 10월 20일(화) 14:00~17:00 / 경남도청 대강당
- 도민공약평가단단 참석자 수 : 31명
- 주요내용 : 도민공약평가단단 교육 및 분임 구성
 - 매니페스토 운동과 도민공약평가단에 대한 교육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 주민참여와 숙의민주주의에 대한 이해
 - 지역현황, 단체장 철학과 그에 따른 핵심정책기조
 - 도민공약평가단 운영 목적, 운영개요, 역할 등
- 5개 분임 구성 및 분임별 향후 회의 안내 분임별 촉진자 4명 참여)
 - 도민공약평가단 역할 및 향후 일정 안내, 분임별 다짐 공유

■ 2차 예비회의

- 일시 및 장소 : 11월 3일(화) 14:00~17:00 / 경남도청 대회의실
- 도민공약평가단단 참석자 수 : 27명
- 주요내용 : 공약 안건 설명회
 - 공약 안건 설명회(주관부서 ⇔ 도민공약평가단)
 - 분임별 배분된 사업 담당자가 직접 설명, 평가단 질의에 대해 답변
 - 설명 종료 후 도민공약평가단 자유 토의

■ 분임별 심의 안건 내용

○ 1분임

- 촉진자: 정현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청년활동가

구분	공 약 명	비 고
조정 안건	동북아 물류 플랫폼 구축 ※ 예산·목표 변경	항만물류과
조정 안건	청소년 근로조건 지킴이 ※ 공약명·목표 변경	노동정책과

○ 2분임

- 촉진자: 이맑음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조직팀장

구분	공 약 명	비 고
조정 안건	항공ICT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 ※ 예산·목표 변경	전략산업과
조정 안건	부산경남청년창업사관학교 분리 유치	창업혁신과

○ 3분임

- 촉진자: 조현배 인터넷신문 뉴스토리 편집국장

구분	공 약 명	비 고
조정 안건	청년 취농인턴제·취농직불제 ※ 공약명·예산·목표 변경	농업정책과
조정 안건	경남농어업특별위원회 및 농어업회의소 설치 ※ 공약명·예산·목표 변경	농업정책과

○ 4분임

- 촉진자: 류일환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자문위원

구분	공 약 명	비 고
조정 안건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복지 확대 ※ 예산·계획 변경	건축주택과
조정 안건	임플란트, 틀니, 관절수술,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 지원 ※ 예산·목표 변경	보건행정과 생활방역 추진단
조정 안건	어르신센터 설치 ※ 예산·목표 변경	노인복지과

○ 5분임

- 촉진자: 류병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운영위원

구분	공 약 명	비 고
조정 안건	경남‘맘 편한’ 원스톱 보육센터 설치 ※ 예산·목표 변경	가족지원과
조정 안건	경남 공공산후조리원 권역별 설치 ※ 목표 변경	가족지원과
조정 안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 예산·목표 변경	가족지원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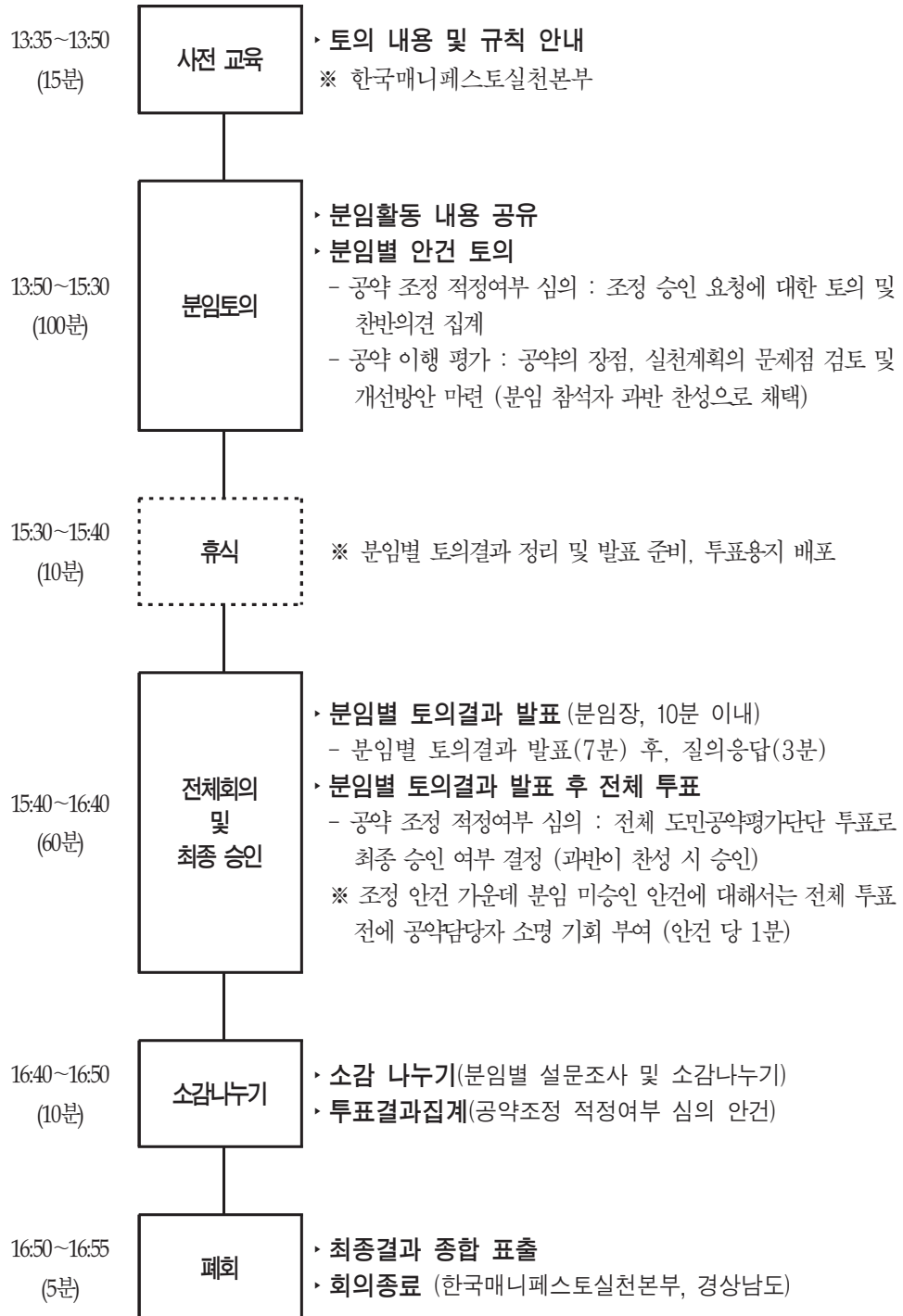
■ 3차 본회의

- 일시 및 장소 : 10.26(월) 14:00~17:00 / 경남도청 대회의실
- 도민공약평가단단 참석자 수 : 23명
- 내용 : 분임회의, 전체회의
 - 분임토의
 - 분임별 소관 안건에 대한 토의 및 의견 정리
 - 분임별 공약 조정 적정여부 심의 : 찬반토의 및 찬반의견 집계
 - 전체회의
 - 분임별 회의 결과 발표 및 질의응답
 - 공약 조정 적정여부 심의 : 전체 도민공약평가단 투표로 최종 승인 여부 결정 (과반 찬성 시 승인)
- 분임 토의는 아래 순서에 따라 진행하고, 배심원 의견을 빠짐없이 기록함.

1. 안건 및 2차 회의 질의응답 내용 설명
2. 순차적으로 평가단의 1차 찬반입장 제시 (1차 조사)
3. 순차적으로 찬반의견에 대한 사유 제시
4. 찬반의견에 대한 토의
5. 2차 찬반 투표 진행 (2차 조사)
6. 토의결과 정리

- 공약 조정 적정여부 심의는 평가단 찬반토의를 거쳐서 분임별 투표를 진행하고 전체회의에서 전체 평가단 투표로 최종 승인 여부를 결정함.
- 전체회의에서 분임별 회의 결과에 대한 도민공약평가단의 개별 질문이 있을 경우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으며, 개별 위원들이 개진한 의견들도 기타의견으로 첨부함.

○ 본회의 진행 방식은 아래 표와 같음.



제3장

도민공약평가단 운영 결과



제3장 도민공약평가단 운영 결과

가. 공약 조정 승인요청에 대한 최종 투표 결과

■ 총 12개의 공약 조정 승인 요청에 대한 투표 결과 12개 안건이 도민공약 평가단 과반 찬성으로 승인되었음.

투표 총 인원 : 23 (명)

분임명	연 번	토 의 안 건	투표결과	
			승인	미승인
경수야 단디해라 (1분임)	1	동북아 물류 플랫폼 구축 ※ 예산·추진개요 변경	19	4
			기권:	0
	2	청소년 근로조건 지킴이 ※ 공약명·목표 변경	17	6
			기권:	0
오늘이 곧 미래다 (2분임)	3	항공ICT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 ※ 예산·목표 변경	20	3
			기권:	0
	4	부산경남청년창업사관학교 분리 유치 ※ 목표 변경	16	7
			기권:	0

인륜지대본 (3분임)	5	청년 취농인턴제·취농직불제 및 경영실습임대농장 조성 ※ 공약명·예산·목표 변경	15	8
			기권:	0
	6	경남농어업특별위원회 및 농어업회의소 설치 ※ 공약명·예산·목표변경	18	5
			기권:	0
가야 (4분임)	7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복지 확대 ※ 예산·계획 변경	19	4
			기권:	0
	8	임플란트·틀니, 관절수술,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 지원 ※ 공약명·목표·내용 변경	16	7
			기권:	0
	9	어르신센터 설치 ※ 목표·예산 변경	17	6
			기권:	0
	10	경남'맘 편한' 원스톱 보육센터 설치 ※ 목표·예산 변경	19	3
			기권:	1
맘 편한 경남 (5분임)	11	경남 공공산후조리원 권역별 설치 ※ 목표 변경	14	8
			기권:	1
	12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 목표·예산변경	19	3
			기권:	1

2. 분임별 안건 설명 및 질의응답

2차 회의(예비회의)에서 이루어진 공약실천계획에 대한 질의응답 내용에 기초하여, 3차 회의(본회의) 분임회의에서 평가토의 및 심의 의결이 이루어졌다.

2차 회의는 도민공약평가단 27명, 촉진자 5명, 공약담당부서 공무원 등이 참석했다. 2차 회의에서는 민선7기 공약실천계획 보고가 이루어졌고, 분임별 심의 안건 담당자가 배석한 가운데 안건에 대한 설명이 진행되었으며, 도민공약평가단의 질의에 담당공무원이 답변하는 형식으로 질의응답이 이루어졌다.

2차 회의 후, 도민공약평가단은 담당부서 면담과 현장 방문 및 분임원들과 토론 등을 거쳐 3차 회의를 준비하였다.

3차 회의(본회의)는 12개 안건에 대해 공약 조정 적정여부 심의를 내용으로 분임 토의 및 전체회의 순서로 진행하였다.

공약 조정 적정여부 심의는 분임토의에서 조정 승인요청에 대한 찬반토의를 실시했고 전체회의에서 전체 배심원 찬반투표로 최종 승인여부를 결정하였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3차 회의(본회의) 진행에 앞서 토의에 임하는 도민공약평가단의 자세와 역할, 심의 과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으며, 전체회의에서 통과된 심의 의결안에 대한 후속작업 등을 전달하였다.

가. 1분임

공약 조정 심의	I -1-4-①	동북아 물류 플랫폼 구축
-------------	----------	---------------

■ 공약사업 담당 부서 설명

○ 당초 공약개요

- 사업기간 : 2019 ~ 2040
- 사업량/목표 : 신항 중심 동북아 물류산업 전진기지 구축, 항만서비스 자유구역 지정, 동북아 물류 R&D센터(단지) 설치와 융·복합 스마트물류단지 조성
- 총사업비 : 13,806,950백만원(임기 내 107,850백만원)
- 주요내용
 - 대형항만유치, LNG벙커링 유치, 항만물류연구 센터 구성·운영
 - 동북아 물류 R&D센터 설치 및 융·복합 스마트물류단지 연구용역 추진
 - 부산항 신항 및 항만배후단지 자유무역지역 확대, 서비스자유구역(무역항) 지정

○ 조정 심의요청 내역 : 예산·추진개요 등 변경

(변경 전)	○ (사업구분) 임기 후 ○ (총사업비) 13,806,950백만원(임기내 107,850백만원) ○ (추진개요[과제 이행계획]) - 동북아 물류산업 전진기지 구축 ① (LNG 벙커링 인프라) 국제해사기구의 해양배출가스 규제, 항만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LNG벙커링 인프라 유치 및 국가 항만계획 반영 ② (항만물류 연구센터 운영) 철도·해운·항만 복합물류 활성화, 북방협력 등에 따른 도내 항만 영향 연구기반과 사업화 방안 마련 - 항만서비스 자유구역 지정 ① (자유무역지역 지정) 200만㎡ ② (무역항 지정) 선박수리·개조산업 클러스터 연계, 선박 입출항 및 선용품 공급 등 서비스 자유구역(무역항) 지정
--------	--

(변경 후)	○ (사업구분) 임기 내 ○ (총사업비) 71,489백만원 ○ (추진개요[과제 이행계획]) - 동북아 물류산업 전진기지 구축 ① (LNG 벙커링 인프라) 삭제 ② (항만물류 연구센터 운영) 동북아 물류플랫폼 구축을 위한 고부가가치 물류산업 육성전략 마련(제도개선, 지원참여 사업화 방안 마련) - 고부가 항만배후단지 조성 ① (자유무역지역 지정) 118만㎡ ① (무역항 지정) 삭제
--------	---

○ 조정사유

(사업구분) 임기 후 → 임기 내

- 당초 공약사항 확정 시 대형항만 경남유치 및 국가항만계획 반영이 가장 핵심사항이었고 제2차 신항만건설기본계획에 입지확정 반영되었음('19. 8. 2.)
- 대형항만(제2신항) 건설 총 사업기간은 단계별로 2040년까지 추진되며 임기 내 착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므로 사업구분을 임기 내로 조정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됨

■ 질의응답

- 배심원 : LNG 부산으로 넘어가서 삭제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벙커링 사업이 당초 예산의 99%인데 LNG가 넘어가면 이 사업은 물류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 아닙니까?
- 담당자 : 담당자 : 제2신항 항만구역내 LNG 벙커링 입지가 나오지 않아 최종적으로 부산 가덕도쪽으로 입지가 정해져 공약에서 삭제하고자 합니다. 당초 공약 추진일정에서 임기내 부분까지 반영하고, 다른 부분은 임기 이후에 공약계획에 포함될 예정입니다. 선박수리 개조산업 클러스터 조성 후 해양수산부 건의하는 것이 당초 공약이었으나 트렌드가 친환경으로 바뀌어서 이 부분이 빠지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규제가

강화될 추세라, 오래된 선박들을 단순 수리하는 것보단 병커씨유의 오염원등을 줄이는 개조와 LNG선 장려 등을 포함하려다보니 임기 이후까지 연장되어서 이번 임기에 추진목표를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 배심원 : 2040년까지의 예산은 어느 정도입니까? (LNG부분)
- 담당자 : 1조 정도입니다. LNG부분 줄어든 예산 대신 다른 사업의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 배심원 : R&D물류단지는 인건비 외에 예산이 어떻게 배정되어 있습니까?
- 담당자 : 변경 후 내용이 더욱 구체화되었고 예산이 증액되었다.
- 배심원 : 2040년까지 지속되어야 하는 사업인데 이번 임기 이후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 담당자 : 이 사업은 경상남도만의 사업보단 국책사업입니다. 현재는 예타 등 행정적인 절차가 이행중인 상황입니다. 18페이지 향후 계획을 보시면 예타 조사 후 22년도 터키공사로 착공이 될 예정입니다. 혹시라도 도지사가 바뀌더라도 국가계획에 따라 지속될 예정입니다.
- 배심원 : 2040년까지의 장기적인 계획인 사업이면 그동안 정권이 몇 번이든 바뀔 수 있는 기간입니다 도민의 입장에선 도비가 집행되기 때문에 불안하게 생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 담당자 : 정기 노선이 잘 발달되어있어 항만의 입지적 요건이 우수합니다. 앞으로의 경쟁력도 충분하여 국가에서 중점적으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 배심원 : 북방 철도망이 연결되면 항만보다 장점이 클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도 고려하여 전체 계획을 세운 것입니까?
- 담당자 : 철도운송이 빠르긴 하지만 철도운송비가 선박운송비보단 비쌉니다. 물동량으로 봤을 때 철도는 선박의 10%정도 비중입니다. 현재는 철도가 언제 연결될지 불확실하지만, 물류 유통의 다양성을 확보하자는

취지를 기본으로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모두 고려하여 계획 중 입니다.

- 배심원 : 명칭이 진해 신항으로 확정되었습니까?
- 담당자 : 국가에서는 항만기본계획과 신항만 기본계획이 따로 있고, 제 4차 항만기본계획에 진해신항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 배심원 : 항만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어장들은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 담당자 : 항만이 조성되면 없어지는 어장에 대해 지원이나 새로운 어장을 조성하는 등의 협의를 민간협의체에서 진행 중이며, 착공 전까지 지속적으로 협의할 계획입니다.
- 배심원 : 예타는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 담당자 : 예타는 이만큼 막대한 예산을 국가가 투입할만한 가치가 있는냐를 평가하는 조사입니다. 11월 완료 예정입니다. 핵심은 B/C(경제타당성)인데 1 이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예타 이후 진해신항으로 이름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 배심원 : 도의 예산이 많이 투입될 것 같은데 다른 정책의 예산들의 피해는 없습니까?
- 담당자 : 국비와 민자 투자가 대부분이며, 일부 도비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지만 전체 사업규모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입니다.

■ 공약사업 담당 부서 설명

○ 당초 공약개요

- 사업기간 : 2019 ~ 2021
- 사업량/목표 : 서면 근로계약서 작성 90%
- 총사업비 : -
- 주요내용
 - 청소년 근로조건 지킴이 선발하여 청소년 노동인권 향상

○ 조정 심의요청 내역 : 공약 명·목표 변경

(변경 전)	○사업명 : 청소년 근로조건 지킴이 ○목 표 : 경남 청소년 아르바이트 노동자의 근로계약서 80% 이상 체결
(변경 후)	○사업명 : 일·학습 병행 대학생 노동인권교육 ○목 표 : 도내 일·학습병행 대학생 1,000여명 노동교육

○ 조정사유

- 당초 선거공약으로 청년사회안전망 확대, 아르바이트 권리지킴이 제도 신설, 청년 알바 임금체불 긴급지원을 제시
- 상기 3개 공약사항을 통합하여 청소년 근로조건 지킴이로 변경하였으나 고용노동부 추진사업과 중복으로 사업비 전액 삭감
- 청소년근로자 노동권익 보호(실태조사 및 직업계 고등학생 대상 노동권익 교육)로 내용 변경 검토 중 초·중·고등학생 교육은 교육청에서 진행하고 있어 중복지원
- 실제 대학생 67%* 정도가 학업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하고 있지만 노동

관련 지식과 정보에 대한 교육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 도내 대학생을 대상으로 사업 변경하여 추진 中

* 아르바이트 포털 ‘알바몬’ 설문조사 결과

■ 질의응답

- 배심원 : 고용노동부에서 중복사업을 진행 중이라 공약 목표를 변경한
다고 하였는데,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사업이 무엇입니까?
- 담당자 : 청소년근로조건지킴이(서포터)를 뽑아서 도와주는 사업입니다.
- 배심원 : 대학생이라는 사업대상보단 청년조례에 맞춰 전체 청년을 대
상으로 사업목표를 확대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 담당자 : 원래 공약은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었습니다. 공약성격 및 목표가 “교육”이라, 대학 진
학을 안했거나 이미 졸업해서 이미 사회활동을 하고 있는 청년층 말고
학업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며 노동법에 익숙하지 않은 학생들을 대상
으로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그래서 당초 취지에 맞게 사업명과 목표
를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 배심원 : 청소년노동 실체조사 결과 공청회의 대상 모집 방식은 어떻게
진행되었습니까?
- 담당자 : 민주노총, 도의원, 시군관계공무원 등 대상자를 제한적으로 모
아서 공청회를 진행하였습니다.
- 배심원 : 근로계약서 작성 관련해서 단속을 강화할 수는 없습니까?
- 담당자 : 고용노동부는 노동 부분에서는 경찰에 준할 정도의 감시 권한
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그러한 권한까지는 없고, 이미 고용노동
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도에서는 한정된 예산 내에서 청년
을 위해 다른 어떤 부분을 지원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 보니 현재 조정
된 방향으로 목표를 수정하게 되었습니다.
- 배심원 : 도내 대학 22개소에 노동인권 교육을 실시할 업체(경남청년유

니온)의 선정 및 교육진행현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담당자 : 경남청년유니온은 민주노총과 관련된 조직입니다. 2,000만원 이하는 경쟁 없이 수의계약으로 진행합니다. 해당 예산은 900만원입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올해는 교육이 진행되지 못한 현실입니다.

나. 2분임

공약 조정 심의	I -1-1-①	항공ICT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
-------------	----------	-------------------

■ 공약사업 담당 부서 설명

○ 당초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1년 ~ 2025년
- 사업량/목표 : 항공ICT 핵심기술개발
- 총사업비 : 5,300억원
 - 주요내용 :
 - (인 프 라) 항공ICT 융합혁신센터, 항공전자 장비 실증용 FTB 플랫폼
 - (기술개발) 6개 핵심기술 자립화
 - (기업지원) 항공ICT 경쟁력 강화 및 글로벌 마케팅 지원사업

○ 조정 심의요청 내역 : 예산·목표 변경

변경 전	○(예 산) : 총사업비 - 530,300백만원 ○(목 표) : 항공ICT 인프라구축 및 핵심기술 자립화
변경 후	○(예 산) : 총사업비 - 143,052백만원 ○(목 표) : 핵심기술개발 및 인프라구축을 통해 미래먹거리 산업발굴

○ 조정사유

<예산 조정>

- 당초 총사업비 5,300억원은 항공ICT 융복합 클러스터 구축에 대한 용역을 수행하기 전의 대략적인 금액이었음.
- 용역결과 총사업비가 2,325억원으로 산업부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 (2019.11월) 하였으나, 항공전자 장비 실증용 *FTB에 대한 수요기업이

없어, 활용방안 미흡 등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기술성 평가에서 탈락 하였음.

*FTB : Flying Test Bed 상용화 테스트베드 항공기

- 과기부 민간위원 컨설팅 결과(2019.12월), 재기획 하여 예타신청을 재도전 하더라도 기업 수요가 없어 예타 통과는 불가능하다는 의견이었음.

• 이에, 항공전자 장비 실증용 FTB부분은 삭제하고, PAV 등 신산업을 포함한 '항공ICT 미래핵심부품 개발 기반구축사업'을 기획하고 있음

• 항공ICT 미래핵심부품 개발 기반구축사업을 기획하는 과정에서 총사업비와 과제목표가 변경되었음

- 총사업비는 143,052백만원(항공ICT 핵심기술개발 사업비 포함)

- 과제목표는 핵심기술개발 및 인프라구축을 통해 미래먹거리 산업발굴

• 항공전자 핵심기술 개발은 기존사업비 그대로 반영하여 지속 추진

<목표 조정>

• 당초 목표가 “항공ICT 인프라구축 및 핵심기술 자립화”인데, 이는 항공전자 FTB 기반구축으로 국산부품을 개발하여 상용화를 통해 핵심기술을 자립화 한다는 의미가 포함되어있음

• 목표가 변경된 이유는 항공전자 FTB 사업이 삭제됨에 따라 핵심기술 개발 수요에 따른 인프라 구축을 통해 미래산업을 발굴하고자 함

■ 질의응답

○ 배심원 : 5,300억원은 너무 크게 산정된 금액이 아닙니까?

○ 담당자 : 인프라 구축과 기술개발 기업지원개발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용은 모두 같고, 처음 사업비를 추산할 때에 추정치로만 잡은 상태여서 정확하지 않은 예산이었습니다.

○ 배심원 : 5,300억원에서 1,430억원으로 줄어드는 내용입니까?

○ 담당자 : 그렇습니다.

- 배심원 : FTB가 핵심이라고 생각하는데, 현재는 수요가 없기 때문에 투자하기 어렵다는 것 때문에 공약사항에서 제외하겠다는 것입니까?
- 담당자 : 그렇습니다.
- 배심원 : 가까운 나라에서는 어느곳에서 FTB를 진행하고 있습니까?
- 담당자 :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시험비행을 하고 있습니다.
- 배심원 : 사천에서도 비행시험을 하는 것으로 아는데, FTB사업과는 다릅니까?
- 담당자 : FTB는 비행시험만 하는 것은 아니라, 비행기를 구매해서 필요한 부분을 개조해서 띄워보기 위함인데, 비행장, 개조 시설등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 배심원 : 카이라는 회사가 공기업입니까?
- 담당자 : 사기업입니다.
- 배심원 : 사기업에서 필요하다는 니즈가 도에서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었습니까? 당초의 공약에 대한 타당성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 담당자 : 카이에서는 체계를 개발하는 회사입니다. 전체적인 협력 기업 등이 많기 때문에, 전체 항공사업의 발전과 육성을 위해서 도에서 인프라를 구축해주는 개념으로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배심원 : 도비 투입되는 것은 인프라구축과, 중소기업 지원 부분입니까?
- 담당자 : 그렇습니다.
- 배심원 : 인프라구축을 보면 내용이 ICT융합혁신센터 건립이 주된 내용인데, 위치는 어디입니까?
- 담당자 :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 배심원 : 신축으로 할 계획입니까?
- 담당자 : 신축비용까지 사업비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건물을

활용하기는 어려운 성격이고 장비들이 많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개 층 정도에 꼭 찰 수준으로 장비가 들어가게 됩니다. 다만 기존건물을 활용하는 방안도 가능하다면 검토 할 수 있습니다.

- 배심원 : 혁신센터 운영은 어떻게 진행 됩니까?
- 담당자 : 기업 지원, 시험평가 장비들이 들어가고, 그 외에 각 기업들이 사용하기 어려운 고가의 장비를 공공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할 예정입니다. 그 안에서 부품평가와 시험 평가들도 이곳에서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운영단을 별도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관련 여러 지자체와 기관과 긴밀한 협력이 필요할 듯 하며,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 배심원 : 사업의 최종 목표는 무엇입니까?
- 담당자 : 산업부에서 미래혁신 부품을 R&D 과제로 기술고도화대한 육성 성과 기업 역량강화, 자립이 최종 목표입니다.
- 배심원 : 당초 안에서는 FTB사업이 주요한 내용이었습니까?
- 담당자 : 그렇지 않습니다. 변경사항이기 때문에 강조했던 것입니다.
- 배심원 : 카이외에 다른 수요는 현재 없는 상태입니까?
- 담당자 : 카이 제안 외에도, ICT산업 육성과 인프라 조성을 위해서 사업을 진행을 하려고 했던 사항이며, 그 외에 별도 수요조사는 없었습니다.
- 배심원 : FTB의 예산이 비율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 담당자 : 혁신 융합혁신 센터 구축에 대한 예산과 FTB도 줄어들은 것입니다.
- 배심원 : 조정안 예산은 제대로 집행이 가능합니까?
- 담당자 : 용역 결과에 따른 사업비 책정이기 때문에 무리 없이 추진이 가능합니다.
- 배심원 : 융합혁신센터에서 주로 이용하는 대상은 어디입니까?
- 담당자 : 중소기업 대상입니다.

- 배심원 : 예산 조정안에 PAV신산업을 포함한 기반구축사업 이 예산으로 진행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 담당자 : FTB는 기체를 확보하고 개조하는 데에 600억 정도가 필요한데 PAV는 대형기체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항공전자와 연계하여, 실내 시험시설을 보강하는 것이기 때문에 FTB보다는 사업비용 규모가 적습니다.
- 배심원 : 글로벌 마케팅 지원사업과 ICT지원 강화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리고 140억 들여서 하는 것은 어떻게 계획이 잡혀있습니까?
- 담당자 : 기술 인증비용지원, 기업에서 수주활동을 할 때 에 해외에서 요구하는 서식지원들을 해줍니다. 시제품 제작비용등도 포함이 됩니다.
- 배심원 : 진행하는 과정 중에 테크노파크의 역할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 담당자 : 용역과 기획 등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 공약사업 담당 부서 설명

○ 당초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9 ~ 2021
- 사업량/목표 : 부산경남청년창업사관학교 명칭변경 및 교육인원 확대, 장소 이전
- 총사업비 : 300백만원(국비)
 - 주요내용 : 부산경남청년창업사관학교 분리유치
 - 경남지역 교육인원 확대(경남, 부산, 울산 각 20명 → 경남 60명)
 - 부산경남청년창업사관학교를 경남청년창업사관학교로 명칭변경 및 이전
- 기타 : '21년 이후 서부권역 추가유치 중장기검토

○ 조정 심의요청 내역 : 목표 변경

변경 전	○('19년) 부산경남청년창업사관학교에서 경남청년창업사관학교로 명칭변경 및 경남 교육인원 확대 ○('21년) 기존 창원시 진해구에서 접근성이 좋은 장소로 이전
변경 후	○('19년) 부산경남청년창업사관학교에서 경남청년창업사관학교로 명칭변경 및 경남 교육인원 확대 (변경사항 없음) ○(중장기) 추가 유치 필요성 재검토 후 필요시 추가유치 추진

○ 조정사유

- 도지사 공약은 경남청년창업사관학교로 명칭변경하고 경남에 배정된 교육인원을 확대하는 것이 핵심내용으로 공약 달성함
- '19년 경남청년창업사관학교로 명칭 변경 완료('19. 6월)
- 당초 경남 정원 20명에서 '19년 55명, '20년 60명으로 정원 확대 완료
- 전국 청년창업사관학교 입교 신청자격은 창업자의 사업장 소재지 기준 4개 권역별*로 가능하여, 경남 창업자의 신청 및 접근 편의를 위해

창원 중심부 이전을 부가적으로 추진한 것임

- 당초 경남청년창업사관학교(진해 소재)의 지리적 단점으로 **경남 창업자 신청이 적을 것을 우려하였으나**, '20년 모집결과 **경남 창업자가 대부분 선정되어** 이전 필요성이 적어짐

- 정원 60명 중 경남 48명*, 부산 12명 선정, 타 지역도 경남인원 선정(부산 5, 울산 2)

⇒ **주요 공약사항은 달성하였고 이전 필요성이 감소되었으며**, 이전비용 협의 및 이전 장소 확보가 어려우므로 향후 수요를 반영한 필요성 재검토 후 필요시 장기과제로 추진

■ 질의응답

- 배심원 : 기존공약은 이미 달성이 되었으나 이전에 관한 부분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 담당자 : 공약사항 자체가 명칭변경을 하고 인원확대까지가 공약이었습니다. 이전에 대한 것은 담당 부서의 자체 판단이었습니다. 중진공 연수원은 직영이기 때문에 비용을 부담할 수 없는 상황이고 도의 예산으로 이전 해준다면 검토를 할 의향이 있다고 했습니다.
- 배심원 : 예산 변경은 없습니까?
- 담당자 : 전혀 없습니다. 당초 계획도 중진공에서 자체적으로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포함하였습니다.
- 배심원 : 위치는 어디입니까?
- 담당자 : 진해 용원 근처입니다. 부산, 경남, 울산 3개 지역을 커버하기 위해 그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 배심원 : 그럼 무슨 이유로 이전을 하려고 합니까?
- 담당자 : 진해 쪽에 치우쳐 있다 보니, 경남 내의 중심지로 이동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 배심원 : 운영주체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담당자 : 현재 직영 5곳은 중진공에서 도맡아 하고 있습니다. 다른 곳은 민간위탁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배심원 : 사관학교 생도들은 위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 담당자 : 지금은 60명 정원 중에 48명이 경남 인원이고, 서부권에서도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치에 대해서는 현재 수요자들에 대한 큰 불만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배심원 : 현재 쿼터를 할당하는 것은 아닌, 모집을 진행하다보니 경남에서 많이 모집된 것입니까?
- 담당자 : 그렇습니다. 4개권역이 있지만, 할당되어 있지 않습니다. 19년도에는 55명이었는데 그 중에 41명이 경남인원이었고 현재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 배심원 : 추후에 수요자들이 늘어났을 경우에 대책은 무엇입니까?
- 담당자 : 정원이 더 늘어난다면 다른 지역에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상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배심원 : 상충인원에 대해 좀 더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 담당자 : T.O가 경남에서만 60명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경남 지역에서만 60명으로 한정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경남에서 신청을 많이 할수록 홍보를 극적으로 하는 것이 최선의 방안입니다.
- 배심원 : 60명으로 늘어났는데 어떤 이유로 확대를 했습니까?
- 담당자 : 도지사님과 도청에서도 관심 있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창업과도 신설했고 인원을 확대하였습니다.
- 배심원 : 교육인원 확대를 위해서 무엇을 노력했습니까?
- 담당자 : 민간연수원 설립 시에 인원을 60명을 반대했을 때 도에서 건의를 했습니다.
- 배심원 : 어차피 중진공에서 열쇠를 갖고 있는데, 창업지원센터같은 창업 관련 컨트롤 타워 등의 사업이 있습니까?

- 담당자 : 경남도에서 창업교육센터가 17개가 산재해 있고, 창조경제 신센터도 있습니다. 별도의 사업으로 허브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 배심원 : 21년 이후에 서부권역에 추가유치는 무엇입니까?
- 담당자 : 아직 확정된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향후에 수요가 더욱 더 늘어나게 된다면 고려할 내용입니다.
- 배심원 : 48명 중에 서부권역의 인원은 어느 정도입니까?
- 담당자 : 1/4정도의 인원입니다.
- 배심원 : 서부권에 개설을 위한 계획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될 예정입니까?
- 담당자 : 수요가 늘어난다고 한다면, 국비 사업을 확보하는 별도 사업을 개소할 예정입니다. 청년창업 사관학교는 기술, 제조창업이 중점지원내용이기 때문에 사실 서부 쪽에 제조사업이 활발하지 않고 수요가 적은 편입니다. 만약 늘어난다면 실행 가능성이 높습니다.
- 배심원 : 교육인원이 어떤 방법으로 늘어나는 것과 경남의 T.O를 규정화 하는 것과 확대하기 위한 홍보 또는 마케팅의 방법 중에 무엇이 당초 공약이었습니까?
- 담당자 : T.O를 한정하는 것은 공약이 아니었습니다. 활성화를 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공약이었습니다.
- 배심원 : 도에서도 제조업과 기술에 대해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더욱 더 활성화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담당자 : 향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배심원 : 현재 부산경남청년창업사관학교의 경쟁률은 어느 정도입니까?
- 담당자 : 지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뒤 선정이 되어야 하는 단계라 아직 2:1까지는 되지 않습니다.
- 배심원 : 60명중에 T.O가 난다면 충원인원은 경남에서 충원합니까?
- 담당자 : 가점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신청하면 똑같이 경쟁합니다.

- 배심원 : 경남은 다른 지역보다 제조업이 높은 쪽에 속하지 않습니까?
- 담당자 : 경남은 제조업 창업부분에 활성화가 미약한 상태입니다.

다. 3분임

공약 조정
심의

I -4-16-①

청년 취업인턴제·취농직불제 및 경영실습임대농장 조성

■ 공약사업 담당 부서 설명

○ 당초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9 ~ 2022
- 사업량/목표 : 청년농업인 육성 480명(연간 120명), 임대농장 9개소(연간 3개소)
- 총사업비 : 7,980백만원
- 주요내용 : 청년 취업인턴제, 청년취농직불제, 경영실습임대농장 조성
 - 청년취농인턴제: 80명(연간 20명)
 - 청년취농직불제: 400명(연간 100명)
 - 경영실습임대농장조성: 9개소(연간 3개소)

○ 조정 심의요청 내역 : 공약명·예산·목표 변경

변경 전	○ 청년 취업인턴제·취농직불제 및 경영실습임대농장 조성 ○ 총사업비 : 7,980백만원 ○ 청년농업인 육성 480명, 임대농장 9개소
변경 후	○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취농직불제 및 경영실습임대농장 조성 ○ 총사업비 : 24,626백만원 ○ 청년농업인 육성 1,080명, 임대농장 9개소

○ 조정사유

- 당초 청년농업인 육성 공약으로 3개 세부과제 선정
 - 청년농업인 취업인턴제, 취농직불제, 경영실습임대농장 조성
- 청년농업인 취업인턴제 사업 부진으로 목표달성 어려움
 - 일자리창출사업 등 유사사업이 많아 사업신청 저조('19년 11명, '20년 7명)

* 고성 다이노스타 청년일자리사업(2년간 인건비 90% 지원), 농식품
부 농업법인취업지원사업

- 코로나19로 인해 생산 및 판매저조로 농업법인의 인력 수요 부족
- 농촌지역 법인 교통 불편으로 청년모집 어려움, 4대보험 가입 농업
법인 많지 않음 등

• 청년농업인 취농인턴제 '19년 주요재정사업 사후평가 결과 “매우미흡”
으로 '21년 사업 예산편성 불투명

• 청년농업인 취농인턴제 사업은 사업규모(연간 사업비 120백만원 사업
량 20명) 및 파급력 미흡하여 세부과제변경 추진

- 제19대 대통령 선거공약과 국정과제(후계 인력양성 및 영농창업 활성화)
세부실천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청년창업농 영농정착 지원사업으로
대체

* '20년 청년창업농 영농정착 지원: 선발 170명, 사업비 4,718백만원

■ 질의응답

○ 배심원 : 농촌 실정을 고려해 청년 나이를 50세까지 확장할 계획은 없
습니까?

○ 담당자 : 청년 기준 40세까지이지만 경상남도는 45세까지 확장했습니
다.

○ 배심원 : 청년이 장기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여건과 관련된 기타 마련
대책은 무엇입니까?

○ 담당자 : 분야별로 유기적이게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 배심원 : 내년에 취농직불제 지원 인원은 몇 명입니까?

○ 담당자 : 지원 인원 100명을 모두 채웠습니다.

○ 배심원 : 청년취농인턴제는 단기적 정책이 아납니까?

○ 담당자 : 귀농사관학교 등을 통해 교육도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배심원 : 직접 보시기에 청년취농인턴제의 문제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

까?

- 담당자 : 비슷한 정책, 농장주의 인식, 수요 부족 등으로 아직 제대로 효과를 못 내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공약사업인 청년창업농 영동정착 사업으로 대체 추진중이라 인턴제사업이 축소됐습니다.
- 배심원 : 1년이 지난 뒤에 성과는 어떻습니까?
- 담당자 : 인턴 경험자들은 나름대로 만족하고 있습니다.
- 배심원 : 경영실습임대농장 확대 계획은 없습니까?
- 담당자 : 지역적으로 확장할 계획이지만 땅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시군과 협의해야하는 문제입니다. 개인적으로 수입이 있어야 하기에 현재 분양 면적을 분할해 참여인원을 늘이기가 어렵습니다.
- 배심원 : 내년의 예산 확보는 어떻게 될 계획입니까?
- 담당자 : 인턴제가 줄고 나머지는 현장 유지로 할 계획입니다.
- 배심원 : 목표를 달성할 확률은 어느 정도입니까?
- 담당자 : 인원이 아직 적은 편이 아니라 달성할 자신이 있습니다.

■ 공약사업 담당 부서 설명

○ 당초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8년 ~ 2022년 6월
- 사업량/목표 :
 - 경남농어업특별위원회 설치
 - 농어업회의소 설치
- 총사업비 : 401백만원
- 주요내용 등
 - 경남 농어업특별위원회 구성·운영
 - 농어업특별위원회 운영 조례 제정
 - 광역 및 시군 농어업회의소 단계별 설치(16개소)

○ 조정 심의요청 내역 : 공약 명 ·예산 ·목표 변경

변경 전	○농어업특별위원회 설치·운영 - 경남 농어업특별위원회 구성·운영 - 농어업특별위원회 운영 조례 제정으로 법적 근거 마련 및 상시 운영 ○ 농어업회의소 설치 - 시·군 단위 순차적 설립 후 도(道)단위(2022년) 설립
변경 후	○농어업특별위원회 설치·운영 - 경남 농어업특별위원회 구성·운영 - 농어업특별위원회 운영 조례 제정으로 법적 근거 마련 및 상시 운영 ○ 농어업회의소 설치 - 시·군 단위 순차적 설립 후 도(道)단위(2022년) 설립

○ 조정사유

- (목표변경) 「농어업회의소 설치」 목표 삭제
- 농어업회의소의 경우 현재 비영리사단법인 형태로 운영 중으로 민간

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설립·운영 되어야 함

- 현재 시·군 및 농민단체 의견 수렴 결과 농어업회의소 설립에 대해서는 공감하나 법 제정이 되지 않은 이상 운영의 어려운 점 등을 들어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많음

- 그간 농어업회의소 설립·운영 지원 사업 수행 결과 시·군 및 농어업인단체의 추진 의지 부족, 공감대 형성 미흡 등의 문제점 발생

- 위와 같은 사유 등으로 연도별 추진목표인 임기 내 16개소 설립 추진은 국회에 입법발의 중인 법안이 통과 되어야 원활히 추진 될 것으로 보아 현재로서는 목표 수행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다만, 금년 운영 예정인 경남연구원 내 경남농어업정책센터를 통해 2021년부터는 도(道)단위로 공감대 형성 등을 위해 권역별 간담회 등을 추진할 계획임

• (예산변경) 농어업특별위원회 예산 변경('21년 52백만원 → 42백만원)

- 그간 추진 결과 등을 반영한 사업비 조정

■ 질의응답

○ 배심원 : 농어업회의소를 조정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담당자 : 운영비 등 보조를 해야 합니다만 현재 법률로는 보조가 어렵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농어업회의소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 배심원 : 대안은 무엇입니까?

○ 담당자 : 농어업특별위원회 등을 통해 계속적으로 자문을 구하고 있습니다.

○ 배심원 : 거창 등 2곳에서 농어업회의소는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 담당자 : 개인 회비를 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직 대의적 기구로는 부족합니다.

○ 배심원 : 설치공약을 내세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 담당자 : 대통령 공약과 도지사의 의지가 확고하였습니다. 궁극적으로 민간 주도로 민관이 협치 해야 합니다. 그 밖으로 농어업회의소 관련

교육을 위해서도 사용이 가능하고 직접적으로 주민들도 사용 가능하게끔 설치하려 했습니다.

- 배심원 : 법률이 통과가 안 된 상태에서 홍보가 가능합니까?
- 담당자 : 지금까지 농어업센터 등을 통해 홍보를 했으나 내년부터 도청 주도로 간담회 등을 홍보에 나서겠습니다.
- 배심원 : 농어업회의소가 민간 주도로 하기 어려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 담당자 : 농어업인의 의지가 부족한 편입니다. 농어업인들이 실질적 효과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배심원 : 농어업회의소를 설치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담당자 : 농어업인들의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공간입니다.
- 배심원 : 예산은 어느 정도입니까?
- 배심원 : 시군에게 보내는 예산은 삭감되었지만 도의 예산은 신규로 편성 예정입니다.

라. 4분임

공약 조정 심의	II-1-20-③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복지 확대
-------------	-----------	-------------------

■ 공약사업 담당 부서 설명

○ 당초 사업 개요

- 사업기간 : 2018 ~ 2022년 6월
- 사업량/목표 : 청년 1인 가구대상 더불어주택 확대, 신혼부부 주거 공급 확대를 위한 아파트 우선공급 확대
- 총사업비 : 1,200백만원(도비 600, 시군비 600)
- 주요내용
 - 청년 1인가구 더불어 주택 확대 : 매년 20호, 총 80호 공급
 - 경남 신혼희망타운 적극 추진 : LH 5개 신혼희망타운(3,253호) 적극 건립 지원

○ 조정 심의요청 내역 : 예산 · 추진개요(과제이행계획) 변경

변경 전	○ (총사업비) 1,200백만원(도비 600, 시군비 600) ○ (추진개요-과제이행계획) - 청년 1인가구 더불어 주택 확대 - 도내 빈집(노인거주 주택, 빈 아파트 포함) 소유자와 입주희망 청년 매칭 - 소유자에게는 리모델링 비용 지원, 입주희망 청년은 시세의 반값에 임대 - 경남 신혼희망타운 적극 추진 - LH에서 5개 공공주택단지에 건립예정인 '신혼희망타운(3,253호)' 적극 지원
변경 후	○ (총사업비) 5,320백만원(도비 3,510, 시군비 1,510, 민간기부 300) ○ (추진개요-과제이행계획) - 청년 1인가구 더불어 나눔주택 확대 · 도내 빈집(노인거주 주택, 빈 아파트 포함) 소유자와 입주희망 청년 매칭 · 소유자에게는 리모델링 비용 지원, 입주희망 청년은 시세의 반값에 임대 - 민간참여형 청년주택 공급 : 총 30호, 사업비 6억 원 · 민간기업의 기부, 도와 시군의 협업으로 청년주택을 공급하여 청년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주거환경 개선 도모 - 맞춤형 청년주택 공급 : 총 40호, 사업비 40억 원 · 공모사업을 통하여 청년의 수요가 반영된 청년주택 모델 발굴 및 확산 · 도내 청년 주거문제 해결과 청년 인구유입으로

	지역경제 활력에 디딤돌 · 경남 신혼희망타운 적극 추진 · LH에서 5개 공공주택단지에 건립예정인 '신혼희망타운(3,253호)' 적극 지원
--	--

○ 조정사유

- (추진개요-과제이행계획 변경)
 -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복지 확대를 위한 「경남 맞춤형 청년·신혼부부 주거지원방안」 수립('20. 8. 3.)에 따라 도정4개년계획 이행과제 세부계획 변경 필요
 - 청년·신혼부부 주거복지 확대를 위해 '20년부터 추진 중인 시범사업 등을 과제이행계획에 추가 반영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 (총사업비 변경)
 - 과제이행계획 변경에 따라 추가 반영된 사업의 예산 반영 및 기존 더불어 나눔 주택 사업 예산 변경
 - 민간참여형 청년주택 및 맞춤형 청년주택 사업비 추가 반영
 - (민간참여형 청년주택) 600백만원 증가
 - (맞춤형 청년주택) 4,000백만원 증가
 - 더불어 나눔주택 사업비 '19~'21년 예산확보액 및 수요 대비 적정 사업량으로 조정 필요 : 1,200백만원 → 720백만원(480백만원 감액)

■ 질의응답

- 배심원 : 경남 인구 2,000명이 감소할 때 청년인구 6만명이 감소한다고 알고 있는데 30~40호 건설 하는게 의미 있는 효과를 가질 수 있을까요?
- 담당자 : 전체 청년인구에 비하면 공급호수가 턱없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후에도 행복주택이나 국민임대 청년들에게 특별 공급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 사업은 청년들의 참여로 청년 수요 맞춤형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재정상의 문제로 규모가 크지 못하지만 확대하려고 합니다.

- 배심원 : 총 수혜인원은 몇 명입니까?
- 담당자 : 여기서 1호는 방 1개를 뜻합니다. 방 2개짜리 5채가 공급되면 10호가 되는 것입니다.
- 배심원 : 맞춤형 청년주택 공모사업을 통해 공급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 담당자 : 시군 공모형으로 올해 처음 추진해봤습니다. 시군마다 청년 특성이 다르므로 시군에서 수요에 맞게 설계해서 제안하면 사업비를 지원 하는 것입니다. 사천의 경우는 신축을 할 예정이고, 고성군은 소요하고 있는 단독주택을 리모델링하여 청년 셰어하우스를 만드는 것입니다. 고성군에서 추진하는 주택은 입지조건도 매우 좋은 편입니다.
- 배심원 : 사천과 고성에는 청년 인원이 어느 정도입니까?
- 담당자 : 공모 사업이다 보니 시군의 의지도 중요합니다. 사천의 경우는 도시재생 사업으로 청년 문화에비뉴를 추진하고 있어서 그것과 연계하고 있습니다. 고성군은 현재 청년센터 같은 것을 추진하고 있는데 청년 유입을 위한 사업과 연계하려고 합니다.
- 배심원 : 청년 주거문제 해결보다는 청년 유입 유도의 성격이 강한 것입니까?
- 담당자 :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배심원 : 어떤 청년이 대상입니까?
- 담당자 : 민간참여형의 경우는 김해에서 하는데 중소기업 근로자를 첫 번째 대상으로 잡았습니다. 중소기업근로자가 1순위, 취업준비생이 2순위, 기타는 3순위입니다. 우선순위는 정하기 나름입니다.
- 배심원 : 더불어 나눔 주택은 빈집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하고 반값으로 임대하게 되면 계약기간과 유지비용은 어느 정도입니까?
- 담당자 : 오래된 빈집을 임대하기 원할 때는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하고, 그 비용을 계산해서 지원금에 비례한 기간에 반값 이하로 임대하고

있습니다. 리모델링 후 유지관리는 집주인이 관리하는 것입니다.

- 배심원 : 민간 참여형 청년주택은 민간 기업의 기부로 진행되는 것이 맞습니까? 만약 없다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 담당자 : 민간 기업참여를 유도하려고 합니다. 올해는 중흥건설의 지원을 받아 추진하였고, 이후의 사업도 기업들과 접촉 중에 있습니다.
- 배심원 : 신혼 희망 타운은 2022년 이후의 계획은 없습니까?
- 담당자 : 공약기간이 2022년까지라 그때까지 계획량을 명시한 것입니다. 그 이후에는 계속 진행되는 것이고 LH가 시행 주체이기 때문에 입지와 규모는 LH가 정하고 있으며, 도의 역할은 협의기관으로 이 점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 배심원 : 더불어 나눔 주택 대상은 어떻게 모집하고 있습니까?
- 담당자 : 시군의 수요를 받아서 임대인을 모집해서 신청하면 도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을 둘 다 찾아야하기 때문에 쉽지가 않습니다.
- 배심원 : 임대인, 임차인 양측 맞추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다른 홍보 방안이 있습니까?
- 담당자 : 홍보 방안을 더 검토해서 마련하겠습니다.
- 배심원 : 입주자격요건은 무엇 입니까?
- 담당자 : 시군별로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 배심원 : 청년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 담당자 : 청년기본법 개정으로 만 19세부터 만 34세까지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 배심원 : 신혼부부의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 담당자 : 혼인 기간으로 7년 이내가 대상이 됩니다.
- 배심원 : 연도별 예산을 보면 청년 더불어 주택과 맞춤형 청년주택이 별도의 카테고리로 따로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담당자 : 당초에는 청년 더불어 나눔주택 밖에 없었습니다. 맞춤형 청년주택은 새로 생긴 것입니다. 청년 더불어주택과 맞춤형 청년주택은 추진 방법이 다르다 보니 명칭을 따로 한 것입니다. 맞춤형 청년주택은 시군공모에 의해 추진하는 것입니다.
- 배심원 : 예산 집행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 담당자 : 2020년의 예산은 마친 상태입니다. 2021년의 예산은 의회의 통과가 남은 상황입니다.
- 배심원 : 청년 더불어 주택은 계획대로 추진되었습니까?
- 담당자 : 예산 확보 금액만큼은 추진되었습니다.
- 배심원 : 민간참여형 청년주택의 의미와 예산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 담당자 : 더불어 나눔 주택은 집주인이 신청해 리모델링하고 5년 동안 반값임대이고, 민간참여형은 민간기부가 들어가기 때문에 따로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민간 1억, 도비 5천, 시비 5천이 투입되었습니다.
- 배심원 : 사업비의 변경 안이 늘어난 것인데, 경제상황 변화에 따라 추후 변경될 가능성은 어느 정도입니까?
- 담당자 : 그 부분도 걱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도지사의 관심이 많으므로 임기 내 정상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 배심원 : 맞춤형 청년주택 공급이 예산이 많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 담당자 : 공모사업이라 어떤 형태와 어떤 주택사업을 제안할지 모르기 때문에 총 사업비의 개념입니다. 공모 들어온 것에 따라 심사 내용에 따라 사업비를 배분한 것입니다.
- 배심원 : 신혼희망사업은 예산이 없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 담당자 : 예산은 LH에서 측정하기 때문에 없는 것입니다.
- 배심원 : WHO에서는 18세~60세를 청년기라 말하는데 다른 부분입니까?
- 담당자 : 그 청년의 기준과 개념이 다른 것 같습니다.

- 배심원 : 더불어나눔주택 입주자 평가는 어떻습니까?
- 담당자 : 지난주에 점검을 해본 결과, 임차인 입장에서는 깨끗한 집에 비교적 저렴한 가격이라 평가가 좋았습니다. 임대인, 임차인의 매칭이나 수요 대응이 쉽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 배심원 : 지원액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 담당자 : 최대 1,500만원입니다. 여기에 자비를 들여 더 할 수도 있고, 덜 할 수도 있습니다. 임대기간은 최대 5년에서 지원금액에 비례해 산출식에 의거합니다.
- 배심원 : 거주하다가 이사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 담당자 : 사업기간동안은 시군에서 직접 관리합니다.

공약 조정
심의

II-2-26-①

임플란트·틀니, 관절수술,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 지원

■ 공약사업 담당 부서 설명

○ 당초 사업 개요

- 사업기간 : 2018년 ~
- 사업량/목표 : 12,960명
- 총사업비 : 22,106백만원
- 주요내용
 - 65세 이상 저소득층 어르신 틀니 및 임플란트 시술비 지원(12,000명, 14,000백만원)
 - 저소득층 어르신에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960명, 1,152백만원)
 - 65세이상 저소득층 어르신 대상포진 무료 접종

○ 조정 심의요청 내역 : 공약 명·내용·목표 변경

변경 전	○ (공약명) 임플란트·틀니, 관절수술,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 지원 ○ (목표 및 내용) - 65세 이상 저소득층 어르신 틀니 및 임플란트 시술비 지원 - 저소득층 어르신에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 65세이상 저소득층 어르신 대상포진 무료 접종
변경 후	○ (공약명) 임플란트·틀니, 관절수술 비용 지원 ○ (목표 및 내용) - 65세 이상 저소득층 어르신 틀니 및 임플란트 시술비 지원 - 저소득층 어르신에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 65세이상 저소득층 어르신 대상포진 무료 접종(삭제)

○ 조정사유 {당초 3개 사업 중 1개 사업 폐기}

- 미추진 사업명 : 대상포진 예방접종 사업
- 미추진 사유
 - 예산 투입 대비 효과성 낮음

- 백신 접종 후 항체생성률 50~60%로 효과가 낮고, 장기간 추적 관찰한 데이터가 없어 안전성 검증 자료 불충분
- 조기 치료시 후유증 없이 완치 가능한 질환이며, 치료시 약제비에 (5~10만원, 치료기간 1주일) 비해, 고가의 백신 접종은 비효율적
- 대상포진은 감염성 질환이 아니며, 법정감염에 미포함되어 국가에서도 필수 예방접종으로 지원해주는 항목이 아님 (국가나 지자체에서 지원하여야 할 의무접종대상 아님)
 -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필수예방접종)에 따라 감염병 예방을 위한 접종이 필요한 질병에 대해 국가예방접종사업을 추진 중에 있음
- 전문가 자문 회의 의견수렴 결과에 따라 도지사 공약사업 추진 재검토, 중앙정부의 예방접종 무료지원 도입 시까지 보류

■ 질의응답

- 배심원 : 어떠한 이유로 이 공약을 조정하는 겁니까?
- 담당자 : 임플란트, 틀니/ 관절수술/ 대상포진 이렇게 세 가지 카테고리를 한 세트로 공약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중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에 대한 다양한 문제제기가 있어 삭제하고자 하는 이유입니다. 전문가 자문 결과 예방접종을 해도 항체가 50~60% 밖에 발생하지 않고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아서 비용 대비 효용성이 낮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대상포진 치료가 5~10만원 정도 드는데 예방접종비용은 13만원이라 과도한 투자라는 의견 등이 있었습니다. 예방접종에 대한 부작용 우려도 같이 있었습니다.
- 배심원 : 현재는 왜 대상포진 예방접종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까?
- 담당자 : 예산도 측정된 바가 없고 보류상태였습니다. 해야 한다면 추경을 세워서 할 수도 있습니다. 600억원정도 소요되는데 과다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 배심원 : 이것이 왜 공약사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까?

- 담당자 : 도지사님의 후보 시절 노인분들께 많은 혜택을 드리고자 약속한 공약입니다.
- 배심원 : 항체 생성률 50~60%로 생성률이 낮고 효율성이 낮다고 하면, 앞으로 백신을 맞을 의향이 있는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메시지를 던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 담당자 : 전체 노인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 비효율과 무리함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 배심원 : 초기(72시간 이내) 치료 시 완치가 가능하다고 했는데 3일 이내 치료를 받는 비율은 어느 정도입니까?
- 담당자 : 증상이 바로 나타나고, 초기에 간다면 치료비가 많이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늦게 가면 훨씬 비용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 배심원 : 중앙정부에서는 무료 예방접종 계획이 있습니까?
- 담당자 : 대상포진은 법정 감염병이 아니므로 무료로 접종을 하기에는 곤란하다는 입장입니다.
- 배심원 : 65세 이상에서 전체 대상입니까? 아님 저소득층 대상입니까?
- 담당자 : 전체 대상입니다.
- 배심원 : 합병증 예방 측면에서 유효하지 않습니까? 굳이 일부의 대상으로 줄여서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까?
- 담당자 : 대상 연령층을 상향하면 예산이 줄어드는 효과는 있겠지만, 고연령대 일수록 효과가 줄어들고 예방접종 부작용등의 우려도 있어서 조심스럽습니다.
- 배심원 : 예방접종 대신 치료비 지원을 해주는 방안은 어떻습니까?
- 담당자 : 저희가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 의견을 주시면 검토해보겠습니다.
- 배심원 : 대상포진 발병률이 2.4%라고 하는데 항체 형성 확률이 50%라면 결국 1.2%의 효과인데, 이를 위해 전체 예방접종을 하는 것은 비효

울적이라고 생각합니다.

- 담당자 : 조기 발견을 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배심원 : 저소득층은 65세 이상도 치료비용을 내야합니까?
- 담당자 : 저소득층에게는 의료급여가 무료로 지급되므로 이 치료비도 소요되지 않습니다.
- 배심원 : 임플란트 틀니는 지원대상은 저소득층 대상인가요?
- 담당자 : 기초생활수급자 등 대상입니다.
- 배심원 : 임플란트 틀니의 시술비는 전액지원 입니까?
- 담당자 : 생활수준에 따라서 지원 비율이 달라집니다.

공약 조정
심의

II-2-26-②

어르신센터 설치

■ 공약사업 담당 부서 설명

○ 당초 사업 개요

- 사업기간 : 2019년 1월 ~ 2022년 6월
- 사업목표 : 어르신센터 20개소 설치
- 총사업비 : 13,578백만원(도비 6,789, 시군비 6,789)
- 주요내용 등
 - 경남형 치매관리사업 전달체계 1단계 역할 수행
 - 어르신 종합돌봄서비스 제공
 - 어르신 사회교류 및 활동 증진
 - 지역 맞춤형 치매예방 특화 모델 정립

○ 조정 심의요청 내역 : 예산·목표 변경

변경 전	○ (목표) 어르신센터 20개소 설치 ○ (예산) 13,578백만원
변경 후	○ (목표) 어르신센터 10개소 설치 ○ (예산) 6,818백만원

○ 조정사유

< 목표 변경 : (당초)20개소 ⇒ (변경)10개소 >

- 코로나19 유행으로 집단이용시설 설치에 대한 부담 발생
 - 금년 코로나19로 인해 치매인지검사, 치매예방교육 등 대면서비스를 중심으로 하는 어르신센터 설치 필요성이 약화된 실정*

*장기간 노인복지관 휴관에 따라 시설 내 어르신센터도 정상 운영 애로 발생

- 시군 수요 부족
 - 어르신센터 향후 시군 수요 조사 결과('20. 7월) 2개 시군 설치 희망
⇒ 2021년 고성군, 2022년 통영시
※ 어르신센터 설치 현황 : 6개소 운영(창원·진주·김해·양산·함안·하동), 1개소 설치 예정(창녕)
 - 시군 복지예산 증가에 대한 부담으로 사업 추진에 소극적
 - 노인인구가 적은 군부의 경우 센터 신규 설치 필요성이 시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아 당초 목표인 전시군 센터 설치에 대한 재검토 필요
 - 설치 장소 부족
 - 어르신센터 주요 설치 장소인 노인복지관 보유 시군 부족 : 6개 시군(19개소)
※ 도내 노인복지관 현황 : 19개소(창원8, 진주3, 김해3, 양산2, 남해1, 하동1, 거창1)
 - 기존 노인복지관의 경우도 여유 공간이 없어 설치 공간 확보에 애로
 - 달성 가능한 현실적 목표 설정과 장기적 사업 추진
 - 2020년 현재 7개소 운영 + 2021~2022년 3개소(창원, 통영, 고성 설치 검토)
 - 2022. 6월까지 총 10개소 설치로 목표를 변경하고 시군 노인복지관 신설 등 신규 설치 사유 발생 시 추가 설치 및 기능 강화 등 장기적 사업 추진 필요
- < 목표 변경(사업량 축소)에 따른 예산 변경 >
- (당초) 13,578백만원 ⇒ (변경) 6,818백만원 ※ 보조비율 도 50% 시군 50%

■ 질의응답

- 배심원 : 현재 있는 공약을 더 잘 활용할 방안은 없습니까?
- 담당자 : 현재 7개 시군에서 설치했습니다. 올해 노인복지관이 휴관 상태라 그 내에 있는 어르신센터도 휴관했습니다. 기존 센터도 활발한 활동을 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방역수칙을 엄수하고 비대면 사업을 개발하는 등 방안을 강구할 예정입니다. 당장은 축소조정이 불가피하더라도,

좋은 실적이 나오고 있는 사업은 장기적으로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 배심원 : 휴관하면 그의 인력도 쉬는 상태입니까?
- 담당자 : 휴관을 해도 인력들은 출근을 하고, 기존 관리 치매어르신 안 부확인 등을 하고 1대1 치매예방 프로그램 등을 하고 있습니다.
- 배심원 : 치매노인 치료기능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함안군에도 치매안심센터가 3군데가 있고, 건강보험공단에도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고 군청이나 대한노인회 등에서 다양한 주체에서 비슷한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기능 중복이 아닙니까?
- 담당자 : 치매예방 프로그램을 여러 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프로그램들이 단기적입니다.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르신센터를 만들고 전담인력을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지급이 아니라 인력 채용 방식으로 하는 것이 그런 이유입니다. 각 시군의 상황이나 치매관리체계를 감안해서 불필요한 곳은 굳이 무리해서 설치할 필요는 없습니다.
- 배심원 : 도시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까? 취약지역인 군 지역을 위해 보강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까?
- 담당자 : 군 지역 어르신들이 연령이 더 많아 치매에 취약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군 단위에서는 해당 군의 노인인구 규모에서 이미 있는 치매안심센터 기능을 더 강화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인력을 채용하는 사업이므로 재정여건이 어려운 군 단위의 부담도 있습니다. 군 단위와 의사소통을 하면서 이 부분은 열어놓고 추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배심원 : 당사자 도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과정도 있습니까?
- 담당자 :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고 보니 제대로 신경을 쓰지 못한 것 같습니다. 도민들과의 소통채널을 확충할 필요성이 보입니다.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 배심원 : 채용 인력은 어느 정도입니까?

- 담당자 : 사회복지사,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어르신지킴이로 인력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 배심원 : 운영방법이 대부분 위탁인데, 위탁업체의 전문성이나 결과에 대한 피드백이나 점검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 담당자 : 대계 노인복지관을 운영하는 법인에 위탁합니다. 행정에서 직영하기에는 총액인건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치매안심센터가 보건소에 설치되고 직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어르신센터는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하는 측면에서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관리감독은 행정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도시와 시군비가 각 50%씩 들어가는 사업인데, 잘 관리되도록 주의 깊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 5분임

공약 조정 심의	II-1-21-②	경남‘맘 편한’원스톱 보육센터 설치
-------------	-----------	---------------------

■ 공약사업 담당 부서 설명

○ 당초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9년 ~
- 사업목표 : ‘맘 편한’ 원스톱 보육센터 5개소 설치
- 총사업비 : 12,000백만원(국비 3,000, 도비 3,000, 시군비 6,000)
- 주요내용 등
 - 결혼·임신·출산·육아 등 원스톱 접근 채널 구축을 위한‘맘 편한’ 원스톱 보육센터설치(공간 통합 및 서비스 연계)
 - 부모와 아이가 편히 쉬고 즐길 수 있는 공간 마련, 각종 프로그램 참여 기회 제공 등

○ 조정 심의요청 내역 : 목표, 예산 변경

변경 전	○ 맘 편한’원스톱 보육센터 5개소 설치 ○ 예산계획(‘19~’22년) : 7,015백만원
변경 후	○ 맘 편한’원스톱 보육센터 2개소 설치 ○ 예산계획(‘19~’20년) : 4,315백만원

○ 조정사유

- 과도한 사업비 부담으로 일선 시군의 소극적인 사업추진 및 의지 부족
- 행정안전부 저출산 대응 공모사업 선정의 불확실성으로 우리 도 사업 추진 여부 불투명
- 시범보육센터 성과 분석 및 타당성 검토 후 장기적으로 확대 여부 결정

■ 질의응답

- 배심원 : 맘 편한 원스톱 보육센터 설치 공약의 경우 설명하신 내용이 이미 조정된 사업인가요?
- 담당자 : 이번 도민공약평가단 회의를 통해서 목표 변경을 하고자 합니다.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을 통해서 예산을 확보해야 해서 목표 개수와 예산을 조정할 수밖에 없는 사정을 이해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배심원 : 인구 감소 원인에 대해 경남의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 담당자 : 인구 감소 원인은 시군에서 고령자 증가와 저출생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현실로 인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자리로 인해 젊은 층이 타 도시로 빠져나가면서 사회적 인구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
- 배심원 : 의령군의 출생아 현황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 담당자 : 올해 들어 9월 말 현재 의령군의 출생아는 96명이고 합천군은 9월 현재 83명이 출생하였습니다.
- 배심원 : 육아통합지원센터에서 새로 추진하는 센터를 통합한다는 의미입니까?
- 담당자 : 기존 육아통합지원센터에 새로 만들어지는 유사 센터나 기관은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남은 설치만 하고, 시군에서 운영을 맡을 예정이라 운영 관련은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 배심원 : 기존 공약에서 5개소의 원스톱 보육센터를 설치한다고 하는데, 2개소의 설치로 변경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저출생이 가장 큰 원인입니까?
- 담당자 : 시군의 사업추진 의지가 필요하나, 사업비 과다 소요 및 저출산율로 인해 신청수요 부족으로 개소수를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저출생은 전국적인 현상이라 경남만의 사정이 아님으로 사업을 계획대로 진행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 배심원 : 합천군의 보육센터 설치 현황이 궁금한 관련 주민들의 의견

수련의 기회를 마련한 자리는 없습니까?

- 담당자 : 센터 설치 축소나 운영 등 관련 정책에 대해서는 주민 의견 수렴 기회를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령군이나 합천군에서 관련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배심원 : 관련된 사업으로는 행정안전부의 공모가 추가로 더 있는 것은 없습니까?
- 담당자 : 유사한 사업으로 거제시에서 행정안전부 공모에 응모한 사업이 있습니다. 출산이나 보육 관련해서는 공모 선정된 사업은 없는 상황입니다. 저출생 관련 사업 공모가 최우선적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 배심원 : 공공산후조리원도 통합해서 운영할 수 없습니까?
- 담당자 : 별개로 생각합니다. 양육과 출산 후 몸조리를 하는 기관은 별도로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공약사업 담당 부서 설명

○ 당초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9. ~
- 대상지역 : 동부(밀양), 서부(하동), 북부(거창)
- 사업량 : 신축 3개소 설치(지상 2층 600㎡, 임산부실 10실)
- 총사업비 : 8,576백만원(도비 4,288, 시군비 4,288)
 - 분담비율 : 도비 50%, 시·군비 50% ※ 부지매입비는 시·군비 별도
 - 주요내용 : 공공산후조리원 권역별 설치·운영 및 취약계층 이용료 감면(70%) 지원

○ 조정 심의요청 내역 : 목표 변경

변경 전	○ 공공산후조리원 권역별 3개소 설치
변경 후	○ 공공산후조리원 권역별 1개소 설치

○ 조정사유

- 지속적인 신생아수 감소와 이용료 감면에 따른 적자 보전을 위한 추가예산 필요 및 시군 의지 부족
 - 경남 출생아 수 : 2018년 21,224명 → 2019년 19,250명(9.3% 감소)
- 공공산후조리원 1개소 운영의 타당성 검토 후 권역별 확대 필요성 제기

■ 질의응답

- 배심원 : 밀양 시에서 설치중인 공공산후조리원도 경남도의 공모 사업을 통해 진행하는 것입니까?
- 담당자 : 공공산후조리원 설치하는 시장, 군수에게 권한이 있는 사업입니다. 경남도의 운영비 지원은 되지 않는 사항이고 설치비만 도비를 지원할 수 있는 사업으로 이해 부탁드립니다.

- 배심원 : 밀양 공공산후조리원이 실시 설계중이라고 하셨는데 그 변경 내용이 설명 부탁드립니다.
- 담당자 : 복도 이동 때 산모가 손잡이를 잡고 이동해야 하는데, 그것이 설계에 반영이 되지 않아서 설계 변경을 하였습니다.
- 배심원 :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업무가 시장, 군수의 권한이라면 도지사가 어떻게 이런 공약을 만들게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공약과 별개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이라면 왜 굳이 공약화 하였습니까?
- 담당자 : 경상남도 안에 있는 시군에서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공약화는 공약을 만들 때 관련 부서에 있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 배심원 : 이런 사업에는 민자 유치는 불가능합니까?
- 담당자 : 현행 법률상으로는 민자 유치가 불가능한 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 배심원 : 설치하고 나서 로봇랜드처럼 유명무실하게 될 가능성은 없는 사업입니까?
- 담당자 : 출생아가 없으면 그렇게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도록 행정기관에서 최선을 다 할 예정입니다.
- 배심원 : 민간 산후조리원에 도 내 어느 지역에 많이 있습니까?
- 담당자 : 창원에 6개소 등 6개의 시 내로 총 27개소가 도내에 있습니다.
- 배심원 : 공공산후 조리원에 며칠간 입원할 수 있고, 지원되는 금액이 궁금합니다.
- 담당자 : 2주일 입원할 수 있고, 취약 계층에게 약 70% 정도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공약사업 담당 부서 설명

○ 당초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8년 ~ 2021년
- 사업목표 : '21년까지 국공립 어린이집 358개소 확충으로 국공립 이용률 40% 달성
- 총사업비 : 76,286백만원
- 주요내용 등 :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40%이상 달성
 - '21년까지 국공립 어린이집 358개소 확충으로 이용률 40% 달성
 - (연간목표) '18년 42개, '19년 66개, '20년 110개, '21년 140개

○ 조정 심의요청 내역 : 목표·예산 변경

변경 전	○ '21년까지 국공립 어린이집 358개소 확충으로 국공립 이용률 40% 달성 ○ 예산계획('18~'21년) : 76,286백만원
변경 후	○ '22년까지 국공립 어린이집 275개소 확충으로 공공보육* 이용률 40% 달성 * 공공보육 : 국공립 + 사회복지법인 + 직장 어린이집 ○ 예산계획('18~'22년) : 51,726백만원

○ 조정사유

- 정책 시행 당시와 현재('20.8월말) 보육여건 변화
 - '18년 대비 어린이집 수 16.2%, 재원 아동 수 9.9% 감소
 - 어린이집 ('18.3월) 3,065개소 ('20.8월) 2,568개소 → 497개소 감소(16.2%)
 - 재 원 수 ('18.3월) 91,345명 ('20.8월) 82,270명 → 9,075명 감소(9.9%)
 - 매년 영유아 수 감소 ⇨ 대상기간 동안 22.6% 감소 추정

- ('18년말) 199,210명 ('20년말 추계) 177,544명 ('22년말 추계) 154,166명
- 아동 1천명 당 어린이집은 14.6개소로(전국 3위) 과잉(전국평균 13.6개소)
 - 만0-6세 아동수 175,625명, 어린이집 수 2,568개
- ⇒ 시행당시와 만료시점의 보육수요 변화 등 시대적 여건 반영 필요

- 장기임차 국공립 전환 선정률 저조
 - 장기임차는 보건복지부의 물량배정 및 선정심사에 의해서만 확충 가능
 - 도의 추진의지 및 요건 충족만으로 확충하기에는 한계
 - 적극 수요 발굴·검증 후 복지부에 신청하나, 기존 운영자에게 운영권 보장됨에 따라 엄격한 검증 및 무분별한 전환 지양으로 최종 선정률 저조
 - ('19년) 신청(20), 선정(14) * 우리도 선정률 70%, 전국평균 70%
 - ('20년) 신청(30), 선정(8) * 우리도 선정률 27%, 전국평균 21%

- 실적 위주 확충 지양, 민간과 상생하는 방향으로 추진
 - 민간상생 및 지역적 보육수요 고려, 효율적·균형적 설치
 - 실적 위주의 무리한 국공립 확충은 경쟁력 있는 민간 어린이집의 운영에 지장을 줄 수 있어 보육수요, 지역적 여건 등 다각도로 검토 후 설치

- 보건복지부의 국정과제 변경 동향
 - '21년까지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 40% 보장
- ⇒ (변경 안) '22년까지 공공보육 이용률40% 달성
 - '21년까지 국공립 이용률 40% 달성에 무리가 있음을 판단함

■ 질의응답

- 배심원 :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공약으로 제시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 담당자 : 국공립어린이집은 정부와 지자체의 인건비 지원 등으로 보육 교사의 안정적인 근무가 가능하고 늦은 시간까지 운영하므로 부모의 선호가 높은 편입니다. 저출산을 극복하고 안정적인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국정과제 및 도정 4개년 계획 공약으로 제시되었습니다.
- 배심원 : 민간어린이집의 공립 형 전환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전환했을 때 어린이집 교사의 신분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 담당자 : 요건에 맞는 개인소유 민간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선별적으로 공립 형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해나가고 있습니다. 공직자 신분으로 바뀌는 것은 아니고, 경력 인정과 함께 운영난 해소를 위한 전반적인 지원을 받게 됩니다.
- 배심원 : 신설 국공립어린이집이 벽에 부딪힌 이유는 무엇입니까?
- 담당자 : 아동 수가 줄어드는 것이 가장 큰 요인이고, 보육수요 대비 어린이집 수가 많아 신설로 국공립을 늘리는 것은 무리가 있고 기존의 어린이집을 전환 하는 것을 중점 추진 중입니다.
- 배심원 : 어린이집 종류가 다양한 만큼 지원하는 형태도 다양합니까?
- 담당자 : 국공립이나 민간 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등 다양한 형태 어린이집이 있고, 유형에 맞는 지원을 하고 있으며 그 종류가 다양합니다.
- 배심원 : 보육료 지원을 도비에서 지원하는 것입니까?
- 담당자 : 보육료는 정부 및 지자체에서 부담하여 국공립이나 민간 어린이집에서 차등 없이 똑같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용 어린이 숫자가 줄어듦에 따라 여러 가지 운영의 어려움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배심원 : 어린이집 신축과 리모델링 사업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 담당자 : 신축은 말 그대로 부지에 건물을 새로 짓는 것이고 리모델링

은 주로 신규 500세대 이상 아파트는 국공립을 의무설치해야 함에 따라 해당 아파트의 관리동 건물을 어린이집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리모델링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 배심원 : 어린이집 리모델링 지원 사업에서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 담당자 : 국공립으로 전환될 때 원장 선임 문제나 아파트 재산의 소유권 문제 등의 발생하고 있어서 일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만, 시설 사용 임차 계약을 통해서 5 ~ 10년 이용 후에 재산이 환원됩니다. 운영권을 주는 방식으로 최초 5년을 보장하고 5년 후에는 관련 위원회 검토, 심의를 거쳐서 원장 운영권 교체도 가능합니다.
- 배심원 : 현재 경남도의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 담당자 : 현재 35개소가 선정, 전환되었습니다. 목표 수량은 달성하지 못했지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결과이니 이해 부탁드립니다.
- 배심원 : 관련 사업의 내년도 전망은 어떻습니까?
- 담당자 : 2021년의 실제 수요를 조사해보니 60여개소인데, 이는 정상 추진할 것이며, 해마다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3. 분임별 토의 내용 및 결과

가. 1분임

공약 조정 심의	I -1-4-①	동북아 물류 플랫폼 구축
-------------	----------	---------------

■ 조정 심의요청 내역 : 예산·추진개요 등 변경

(변경 전)	○ (사업구분) 임기 후 ○ (총사업비) 13,806,950백만원(임기내 107,850백만원) ○ (추진개요[과제 이행계획]) - 동북아 물류산업 전진기지 구축 ① (LNG 벙커링 인프라) 국제해사기구의 해양배출가스 규제, 항만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LNG벙커링 인프라 유치 및 국가 항만계획 반영 ② (항만물류 연구센터 운영) 철도·해운·항만 복합물류 활성화, 북방협력 등에 따른 도내 항만 영향 연구기반과 사업화 방안 마련 - 항만서비스 자유구역 지정 ① (자유무역지역 지정) 200만㎡ ② (무역항 지정) 선박수리·개조산업 클러스터 연계, 선박 입출항 및 선용품 공급 등 서비스 자유구역(무역항) 지정
(변경 후)	○ (사업구분) 임기 내 ○ (총사업비) 7,489백만원 ○ (추진개요[과제 이행계획]) - 동북아 물류산업 전진기지 구축 ① (LNG 벙커링 인프라) 삭제 ② (항만물류 연구센터 운영) 동북아 물류플랫폼 구축을 위한 고부가가치 물류산업 육성전략 마련(제도개선, 자원참여 사업화 방안 마련) - 고부가 항만배후단지 조성 ① (자유무역지역 지정) 118만㎡ ② (무역항 지정) 삭제

○ 조정사유

(사업구분) 임기 후 → 임기 내

- 당초 공약사항 확정 시 대형항만 경남유치 및 국가항만계획 반영이

가장 핵심사항이었고 제2차 신항만건설기본계획에 입지확정 반영되었음('19. 8. 2.)

- 대형항만(제2신항) 건설 총 사업기간은 단계별로 2040년까지 추진되며 임기 내 착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므로 사업구분을 임기 내로 조정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됨

■ 찬반 투표 결과 및 최종 투표 결과

분임 찬반 투표 결과				전체 투표결과			
	찬성	반대	기권	승인	미승인	기권	참여자
1차 조사	4	0	0	19	4	0	23
2차 조사	4	0	1				

■ 찬성의견

- 이 사업은 임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는 국책사업이다. 임기 이후의 실행계획은 다음 임기 계획에 반영해야 하는 점에 공감하므로 변경 안에 찬성한다.
- 사업비가 축소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번 임기 사업계획에는 이번 임기에 해당하는 예산만 책정되어야 하기 때문으로, 변경 안에 찬성한다. LNG선 장려 등 친환경 정책 기조도 강화된 기준에 맞추어 진행하려는 정책방향에 공감한다.
- 국가 정책에 따라 계획이 이미 정해져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찬성하는 측면이 있으나, 절차의 정당성과 현실성 등 공무원의 설명이 납득되어 찬성한다.

■ 반대의견

- 없음

■ 기타의견

- LNG부분이 가덕도로 넘어가면 진해신항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 면에선 기대치가 낮아지게 되는데, 주는 것이 있으면 받는 것이 있어야 한다.

앞으로의 정책 진행에 있어 일자리 창출 부분도 놓치지 말기를 바란다.

- 친환경이 유행이라고 해서 무작정 따라가는 것에는 반대한다. 확실한 청사진을 가지고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했으면 한다.
- 원안은 LNG 사업 예산이 대부분인데 그 부분이 가덕도로 넘어가게 되면 진해항만은 소규모 항만이 될 뿐이다. 원래의 공약 취지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경상남도는 국가정책에 따라 실행만 할 뿐이라는 절차에 대한 공무원의 설명을 납득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차마 반대하지는 못하고 기권하였다.

■ 최종결론

- 분임토의 1, 2차 투표 결과 조정안에 배심원 중 4명이 찬성, 1명이 기권하였음.
- 전체 회의 투표 결과 19명이 찬성, 4명이 반대하여 조정안이 최종 통과(승인)되었음.

공약 조정
심의

I -2-7-③

청소년 근로조건 지킴이

■ 조정 심의요청 내역 : 공약 명·목표 변경

(변경 전)	○사업명 : 청소년 근로조건 지킴이 ○목 표 : 경남 청소년 아르바이트 노동자의 근로계약서 80% 이상 체결
(변경 후)	○사업명 : 일·학습 병행 대학생 노동인권교육 ○목 표 : 도내 일·학습병행 대학생 1,000여명 노동교육

○ 조정사유

- 당초 선거공약으로 청년사회안전망 확대, 아르바이트 권리지킴이 제도 신설, 청년 알바 임금체불 긴급지원을 제시
- 상기 3개 공약사항을 통합하여 청소년 근로조건 지킴이로 변경하였으나 고용노동부 추진사업과 중복으로 사업비 전액 삭감
- 청소년근로자 노동권익 보호(실태조사 및 직업계 고등학생 대상 노동권익 교육)로 내용 변경 검토 중 초·중·고등학생 교육은 교육청에서 진행하고 있어 중복지원
- 실제 대학생 67%* 정도가 학업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하고 있지만 노동 관련 지식과 정보에 대한 교육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 도내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사업 변경하여 추진 중

* 아르바이트 포털 '알바몬' 설문조사 결과

■ 찬반 투표 결과 및 최종 투표 결과

분임 찬반 투표 결과				전체 투표결과			
	찬성	반대	기권	승인	미승인	기권	참여자
1차 조사	1	3	0	17	6	0	23
2차 조사	2	2	1				

■ 찬성의견

- 당초 공약인 [청소년 근로조건 지키미]는 이미 고용노동부 및 교육청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도의회에서도 18년도에 예산을 전액 삭감하여서 원안의 사업을 진행할 수 없다는 설명이 납득된다. 공약 폐기 대신 다른 방향으로 노동취약계층을 지원하려는 방향에 동의하기 때문에 변경에 찬성한다.

■ 반대의견

- 제공된 추가 자료를 통해 변경 사유에 대해서는 납득했으나, 바뀐 공약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설명이 부족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자료 제공을 요청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하였다.
- 도 정책에 대한 명분 유지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을인 청년층을 교육할 것이 아니라, 갑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교육 및 법 집행 강화를 해야 한다고 본다.

■ 기타의견

- 사업자 신청을 할 때 사업자등록증이 너무 쉽게 나온다. 사업자등록증을 발부할 때 사업주에게 의무를 이행하도록 서명을 받는 절차가 필요하고, 반복적으로 노동법 준수 교육을 받도록 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

■ 최종결론

- 분임토의 1, 2차 투표 결과 조정안에 배심원 중 2명이 찬성, 2명이 반대, 1명이 기권하였음.
- 전체 회의 투표 결과 17명이 찬성, 6명이 반대하여 조정안이 최종 통과(승인)되었음.

나. 2분임

공약 조정 심의	I -1-1-①	항공ICT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
-------------	----------	-------------------

■ 조정 심의요청 내역 : 예산·목표 변경

변경 전	○(예 산) : 총사업비 - 530,300백만원 ○(목 표) : 항공ICT 인프라구축 및 핵심기술 자립화
변경 후	○(예 산) : 총사업비 - 143,052백만원 ○(목 표) : 핵심기술개발 및 인프라구축을 통해 미래먹거리 산업발굴

○ 조정사유

<예산 조정>

- 당초 총사업비 5,300억원은 항공ICT 융복합 클러스터 구축에 대한 용역을 수행하기 전의 대략적인 금액이었음.
- 용역결과 총사업비가 2,325억원으로 산업부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2019.11월) 하였으나, 항공전자 장비 실증용 *FTB에 대한 수요기업이 없어, 활용방안 미흡 등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기술성 평가에서 탈락 하였음.

*FTB : Flying Test Bed 상용화 테스트베드 항공기

- 과기부 민간위원 컨설팅 결과(2019.12월), 재기획 하여 예타신청을 재도전 하더라도 기업 수요가 없어 예타 통과는 불가능하다는 의견이었음.
- 이에, 항공전자 장비 실증용 FTB부분은 삭제하고, PAV 등 신산업을 포함한 '항공ICT 미래핵심부품 개발 기반구축사업'을 기획하고 있음
- 항공ICT 미래핵심부품 개발 기반구축사업을 기획하는 과정에서 총사업비와 과제목표가 변경되었음
- 총사업비는 143,052백만원(항공ICT 핵심기술개발 사업비 포함)

- 과제목표는 핵심기술개발 및 인프라구축을 통해 미래먹거리 산업발굴
- 항공전자 핵심기술 개발은 기존사업비 그대로 반영하여 지속 추진

<목표 조정>

- 당초 목표가 “항공ICT 인프라구축 및 핵심기술 자립화”인데, 이는 항공전자 FTB 기반구축으로 국산부품을 개발하여 상용화를 통해 핵심기술을 자립화 한다는 의미가 포함되어있음
- 목표가 변경된 이유는 항공전자 FTB 사업이 삭제됨에 따라 핵심기술 개발 수요에 따른 인프라 구축을 통해 미래 산업을 발굴하고자 함

■ 찬반 투표 결과 및 최종 투표 결과

분임 찬반 투표 결과				전체 투표결과			
	찬성	반대	기권	승인	미승인	기권	참여자
1차 조사	4	0	0	20	3	0	23
2차 조사	4	0	0				

■ 찬성의견

- 현재 원안대로 진행되기에는 무리가 있다. FTB에 대한 수요가 적기 때문에 미래가 불투명한 사업에 큰예산을 무리해서 투자하기보다는 우선은 축소해서 조정안대로 진행하고 중장기화 하여 향후에 재검토하는 것이 좋겠다.
- 당초안과, 조정안의 구체적인 계획의 부재 등, 개선방안이 많아 보이는 공약이나, 현실적으로 진행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찬성한다.
- 조정이후 현실화 된 예산으로 충분히 사업이 충분히 사업이 진행 가능하다고 하였으니, 찬성 한다 조정안대로 사업이 잘 추진되길 바란다.

■ 반대의견

- 없음

■ 기타의견

- 항공사업은 전문적인 영역이지만, 이 또한 국민의 세금으로 추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의 목표와 필요성, 효과, 향후 세부 계획에 대한 도민들과의 공감대 형성이 필요해 보인다.
- 수요부족에 의한 계획 수정자체에 대한 내용은 공감하나, 수정안에 대한 기초타당성 조사와 수요조사, 실효성에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 조정안의 계획이 더욱 구체적이었다면 찬반에 대한 결정이 명확했을 듯하다. 향후에라도 사업계획을 구체화 하는 과정에서 도민들과 함께 논의하면서 진행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 2년 동안 도에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추진현황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다.

■ 최종결론

- 분임토의 1, 2차 투표 결과 조정안에 배심원 4명이 찬성하였음.
- 전체 회의 투표 결과 20명이 찬성, 3명이 반대하여 조정안이 최종 통과 (승인)되었음.

공약 조정
심의

I -2-7-④

부산경남청년창업사관학교 분리 유치

■ 조정 심의요청 내역 : 목표 변경

변경 전	○('19년) 부산경남청년창업사관학교에서 경남청년창업사관학교로 명칭변경 및 경남 교육인원 확대 ○('21년) 기존 창원시 진해구에서 접근성이 좋은 장소로 이전
변경 후	○('19년) 부산경남청년창업사관학교에서 경남청년창업사관학교로 명칭변경 및 경남 교육인원 확대 (변경사항 없음) ○(중장기) 이전 필요성 재검토 후 필요시 이전 추진

○ 조정사유

- 도지사 공약은 경남청년창업사관학교로 명칭변경하고 경남에 배정된 교육인원을 확대하는 것이 핵심내용으로 공약 달성함
- '19년 경남청년창업사관학교로 명칭 변경 완료('19. 6월)
- 당초 경남 정원 20명에서 '19년 55명, '20년 60명으로 정원 확대 완료
- 전국 청년창업사관학교 입교 신청자격은 창업자의 사업장 소재지 기준 4개 권역별*로 가능하여, 경남 창업자의 신청 및 접근 편의를 위해 창원 중심부 이전을 부가적으로 추진한 것임
- 당초 경남청년창업사관학교(진해 소재)의 지리적 단점으로 경남 창업자 신청이 적을 것을 우려하였으나, '20년 모집결과 경남 창업자가 대부분 선정되어 이전 필요성이 적어짐

- 정원 60명 중 경남 48명*, 부산 12명 선정, 타 지역도 경남인원 선정(부산 5, 울산 2)

⇒ 주요 공약사항은 달성하였고 이전 필요성이 감소되었으며, 이전비용 협의 및 이전 장소 확보가 어려우므로 향후 수요를 반영한 필요성 재검토 후 필요시 장기과제로 추진

■ 찬반 투표 결과 및 최종 투표 결과

분임 찬반 투표 결과				전체 투표결과			
	찬성	반대	기권	승인	미승인	기권	참여자
1차 조사	3	1	0	16	7	0	23
2차 조사	3	1	0				

■ 찬성의견

- 수요에 비해 공급이 어느 정도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조정 하는 것에 찬성한다.
- 현재도 수요자들이 큰불편이 없다고 하였기 때문에, 굳이 무리해서 이전을 추진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
- 현재 이전 자체에 대한 타당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중장기화 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도민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실제 수요자들에게 의견을 물어가며 향후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좋을 듯 하다.
- 이전 비용도 도비로 지출해야 하는 등 사업의 리스크가 존재하기 때문에 향후 필요성에 의해 검토해보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 반대의견

- 지리적 단점을 극복하고자 이전 하는 것이 당초안의 목표였는데, 이를 해소하기 위한 조정안의 향후 계획이 구체적이지 못하다. 조정안이 당초안의 목표를 수렴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함으로 반대한다.
- 조정의 필요성과 조정사유 자체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나, 조정안의 구체적인 계획이 제시되어야만 조정에 찬성을 할 수 있을 듯하다.
- 경남인원 수요자의 쿼터를 두는 것이 아니라 홍보 마케팅 등 실제로 효과를 검증하기 어려운 추진상황이었고, 교육인원 T.O를 규정화 하여 확대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인원을 확대했다고 판단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단순 이전비용에 대한 도비 지출 등에 대한 리스크 때문에

조정하는 사안으로 보이기에 반대한다.

■ 기타의견

- 향후 경남의 창업여건과 인재양성 측면에서도 계속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 향후 수요가 늘어 경쟁률이 심화된다고 하였을 때 굳이 직영이 아니라 민간위탁의 형식으로 추가 개소를 설치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 취업지원, 창업지원이 단순성과 형 일자리 매칭 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 수요자가 원하는 니즈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실질적으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역량 강화 등 다방면으로 지원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 경쟁률이 2:1인 이유가 사업계획서 심사를 받아야하는 진입장벽이 있는 것 때문이라고 하였으므로, 도에서는 단순 홍보마케팅지원 뿐만 아니라, 사업계획서 작성 요령 등 아이디어를 현실화 할 수 있도록, 창업인의 기초 양성능력을 지원해주는 것이 좋을 듯하다.

■ 최종결론

- 분임토의 1, 2차 투표 결과 조정안에 배심원 3명이 찬성, 1명이 반대하였음.
- 전체 회의 투표 결과 16명이 찬성, 7명이 반대하여 조정안이 최종 통과(승인)되었음.

다. 3분임

공약 조정 심의	I -4-16-① 청년 취업인턴제·취농직불제 및 경영실습임대농장 조성
-------------	--

■ 조정 심의요청 내역 : 공약명·예산·목표 변경

변경 전	○ 청년 취농인턴제·취농직불제 및 경영실습임대농장 조성 ○ 총사업비 : 7,980백만원 ○ 청년농업인 육성 480명, 임대농장 9개소
변경 후	○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취농직불제 및 경영실습임대농장 조성 ○ 총사업비 : 24,626백만원 ○ 청년농업인 육성 1,080명, 임대농장 9개소

○ 조정사유

- 당초 청년농업인 육성 공약으로 3개 세부과제 선정
 - 청년농업인 취농인턴제, 취농직불제, 경영실습임대농장 조성
- 청년농업인 취농인턴제 사업 부진으로 목표달성 어려움
 - 일자리창출사업 등 유사사업이 많아 사업신청 저조('19년 11명, '20년 7명)
 - * 고성 다이노스타 청년일자리사업(2년간 인건비 90% 지원), 농식품부 농업법인취업지원사업
 - 코로나19로 인해 생산 및 판매저조로 농업법인의 인력 수요 부족
 - 농촌지역 법인 교통 불편으로 청년모집 어려움, 4대보험 가입 농업법인 많지 않음 등
- 청년농업인 취농인턴제 '19년 주요재정사업 사후평가 결과 “매우미흡”으로 '21년 사업 예산편성 불투명
- 청년농업인 취농인턴제 사업은 사업규모(연간 사업비 120백만원 사업

량 20명) 및 파급력 미흡하여 세부과제변경 추진

- 제19대 대통령 선거공약과 국정과제(후계 인력양성 및 영농창업 활성화) 세부실천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청년창업농 영농정착 지원사업으로 대체

* '20년 청년창업농 영농정착 지원: 선발 170명, 사업비 4,718백만원

■ 찬반 투표 결과 및 최종 투표 결과

분임 찬반 투표 결과				전체 투표결과			
	찬성	반대	기권	승인	미승인	기권	참여자
1차 조사	3	2	0	15	8	0	23
2차 조사	3	2	0				

■ 찬성의견

- 예산이 더 증액해 활성화해야 한다. 예산도 확대하고 참여 인원도 늘려야 한다.
- 국비와 도비가 들어가는데 시군도 사업비를 내야 한다. 도와 시와 군이 힘을 모아 사업 규모를 확대했으면 좋겠다.
- 취농인턴제는 효과가 적고 참여인원도 적다. 기존부터 해오던 영농정착제에 더 중점을 두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 참여자들이 장기적으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면 꾸준히 추진해야 한다.

■ 반대의견

- 다른 사업과 중복됐다. 예를 들면 기존에도 공장과 연계한 사업이 있었는데 별다른 성과가 없는 걸로 알고 있다. 농업 기술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 정책에 맞춰 보조금 등을 노리는 인원들이 있다. 이를 해결해야 한다. 실제 농사를 짓는 사람들에게 정서적으로 불이익이 될 수도 있다.

■ 기타의견

- 공무원들이 정책을 수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제도의 문제점을 찾고 고쳐나가고 좋은 점은 밀고 나가는 것 또한 중요하다.
- 경영실습임대 농장을 더 늘려 참여자도 늘렸으면 좋겠다.
- 마스크 등으로 대화가 부자유스럽다.
- 공무원과 직접 토론하는 것도 좋다.
- 공약대로 실천하면 좋은데 수정하고 조정하는 것은 그 만큼 준비가 덜 된 것 아닐까 생각한다. 신뢰성도 떨어진다.
- 정책 홍보도 필요하다.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사람도 많다.

■ 최종결론

- 분임토의 1, 2차 투표 결과 조정안에 배심원 중에서 3명이 찬성, 2명이 반대하였음.
- 전체 회의 투표 결과 15명이 찬성, 8명이 반대하여 조정안이 최종 통과(승인)되었음.

공약 조정
심의

I-4-17-①

경남농어업특별위원회 및 농어업회의소 설치

■ 조정 심의요청 내역 : 공약 명 ·예산 ·목표 변경

변경 전	○농어업특별위원회 설치·운영 - 경남 농어업특별위원회 구성·운영 - 농어업특별위원회 운영 조례 제정으로 법적 근거 마련 및 상시 운영 ○ 농어업회의소 설치 - 시·군 단위 순차적 설립 후 도(道)단위(2022년) 설립
변경 후	○농어업특별위원회 설치·운영 - 경남 농어업특별위원회 구성·운영 - 농어업특별위원회 운영 조례 제정으로 법적 근거 마련 및 상시 운영 ○ 농어업회의소 설치 - 시·군 단위 순차적 설립 후 도(道)단위(2022년) 설립

○ 조정사유

- (목표변경) 「농어업회의소 설치」 목표 삭제
 - 농어업회의소의 경우 현재 비영리사단법인 형태로 운영 중으로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설립·운영 되어야 함
 - 현재 시·군 및 농민단체 의견 수렴 결과 농어업회의소 설립에 대해서는 공감하나 법 제정이 되지 않은 이상 운영의 어려운 점 등을 들어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많음
 - 그간 농어업회의소 설립·운영 지원 사업 수행 결과 시·군 및 농어업인 단체의 추진 의지 부족, 공감대 형성 미흡 등의 문제점 발생
 - 위와 같은 사유 등으로 연도별 추진목표인 임기 내 16개소 설립 추진은 국회에 입법발의 중인 법안이 통과 되어야 원활히 추진 될 것으로 보아 현재로서는 목표 수행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다만, 금년 운영 예정인 경남연구원 내 경남농어업정책센터를 통해 2021년부터는 도(道)단위로 공감대 형성 등을 위해 권역별 간담회 등을

추진할 계획임

- (예산변경) 농어업특별위원회 예산 변경('21년 52백만원 → 42백만원)
 - 그간 추진 결과 등을 반영한 사업비 조정

■ 찬반 투표 결과 및 최종 투표 결과

분임 찬반 투표 결과				전체 투표결과			
	찬성	반대	기권	승인	미승인	기권	참여자
1차 조사	5	0	0	18	5	0	23
2차 조사	5	0	0				

■ 찬성의견

- 지방자치단체나 농협 등에서 유사한 일을 하고 있다.
- 농어업인의 의견이 중요한데 정부(도청)에서 강제로 설치하는 건 좋지 않다. 농어업인이 자발적으로 설치(설립)하지 않으면 참여도도 떨어질 것 같다.

■ 반대의견

- 없음

■ 기타의견

- 없음

■ 최종결론

- 분임토의 1, 2차 투표 결과 조정안에 배심원 중에서 5명 전원이 찬성하였음.
- 전체 회의 투표 결과 18명이 찬성, 5명이 반대하여 조정안이 최종 통과(승인)되었음.

라. 4분임

공약 조정 심의	II-1-20-③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복지 확대
-------------	-----------	-------------------

■ 조정 심의요청 내역 : 예산·추진개요(과제이행계획) 변경

변경 전	○ (총사업비) 1,200백만원(도비 600, 시군비 600) ○ (추진개요-과제이행계획) - 청년 1인가구 더불어 주택 확대 - 도내 빈집(노인거주 주택, 빈 아파트 포함) 소유자와 입주희망 청년 매칭 - 소유자에게는 리모델링 비용 지원, 입주희망 청년은 시세의 반값에 임대 - 경남 신혼희망타운 적극 추진 - LH에서 5개 공공주택단지에 건립예정인 '신혼희망타운(3,253호)' 적극 지원
변경 후	○ (총사업비) 5,320백만원(도비 3,510, 시군비 1,510, 민간기부 300) ○ (추진개요-과제이행계획) - 청년 1인가구 더불어 나눔주택 확대 · 도내 빈집(노인거주 주택, 빈 아파트 포함) 소유자와 입주희망 청년 매칭 · 소유자에게는 리모델링 비용 지원, 입주희망 청년은 시세의 반값에 임대 - 민간참여형 청년주택 공급 : 총 30호, 사업비 6억 원 · 민간기업의 기부, 도와 시군의 협업으로 청년주택을 공급하여 청년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주거환경 개선 도모 - 맞춤형 청년주택 공급 : 총 40호, 사업비 40억 원 · 공모사업을 통하여 청년의 수요가 반영된 청년주택 모델 발굴 및 확산 · 도내 청년 주거문제 해결과 청년 인구유입으로 지역경제 활력에 디딤돌 - 경남 신혼희망타운 적극 추진 · LH에서 5개 공공주택단지에 건립예정인 '신혼희망타운(3,253호)' 적극 지원

○ 조정사유

- (추진개요-과제이행계획 변경)
 -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복지 확대를 위한 「경남 맞춤형 청년·신혼부부 주거지원방안」 수립('20. 8. 3.)에 따라 도정4개년계획 이행과제 세부계획 변경 필요
 - 청년·신혼부부 주거복지 확대를 위해 '20년부터 추진 중인 시범사업 등을 과제이행계획에 추가 반영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 (총사업비 변경)

- 과제이행계획 변경에 따라 추가 반영된 사업의 예산 반영 및 기존 더불어 나눔 주택 사업 예산 변경
- 민간참여형 청년주택 및 맞춤형 청년주택 사업비 추가 반영
(민간참여형 청년주택) 600백만원 증가
(맞춤형 청년주택) 4,000백만원 증가
- 더불어 나눔주택 사업비 '19~'21년 예산확보액 및 수요 대비 적정 사업량으로 조정 필요 : 1,200백만원 → 720백만원(480백만원 감액)

■ 찬반 투표 결과 및 최종 투표 결과

분임 찬반 투표 결과				전체 투표결과			
	찬성	반대	기권	승인	미승인	기권	참여자
1차 조사	3	1	0	19	4	0	23
2차 조사	3	1	0				

■ 찬성의견

- 청년주거복지 차원에서는 변경 안이 마음에 드는 대안은 아닌 것이 사실임. 변경 안으로 추가할 사업으로 공모를 통해 맞춤형청년주택을 추진 중이라고 하는데, 주거복지보다는 청년유입을 위한 사업인 것 같음. 청년유입을 위한 사업이라면 조정안의 사업계획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승인 의견임.
- 담당자들이 전문지식을 가지고 의욕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보여 믿고 힘을 실어주는 차원에서 승인 의견임.
- 청년주거복지는 인구증가정책으로서의 의미가 크다고 생각함.

■ 반대의견

- 조정안으로 변경되면서 사업이 다양화되었는데, 변경 안으로 추가한 사업이 가진 효과상의 차별성을 못 느끼겠고, 반면에 수혜인원에 비해 예

산이 과도한 것 같음.

- 빈집 리모델링은 수요가 적은 곳에 주택이 입지해 있을 가능성이 커서 실제 추진이 어렵다 보니 이런 대안이 제시된 것 같으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변경 안에 추가된 맞춤형 청년주택 공급은 수혜자 대비 예산이 너무 큰 것 같음. 기존의 더불어나눔주택 (빈집리모델링)의 문제점을 해결하여 더 확대해 나가는 방향이 맞는 것 같음.

■ 기타의견

- 농촌지역에 빈 집이 많은데 구태여 예산을 들여 청년주거복지를 위해 새로 집을 지을 필요가 있는지 의문임.

■ 최종결론

- 분임토의 1, 2차 투표 결과 조정안에 배심원 중에서 3명이 찬성, 1명이 반대하였음.
- 전체 회의 투표 결과 19명이 찬성, 4명이 반대하여 조정안이 최종 통과 (승인)되었음.

■ 조정 심의요청 내역 : 공약 명·내용·목표 변경

변경 전	○ (공약명) 임플란트·틀니, 관절수술,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 지원 ○ (목표 및 내용) - 65세 이상 저소득층 어르신 틀니 및 임플란트 시술비 지원 - 저소득층 어르신에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 65세이상 저소득층 어르신 대상포진 무료 접종
변경 후	○ (공약명) 임플란트·틀니, 관절수술 비용 지원 ○ (목표 및 내용) - 65세 이상 저소득층 어르신 틀니 및 임플란트 시술비 지원 - 저소득층 어르신에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 65세이상 저소득층 어르신 대상포진 무료 접종(삭제)

○ 조정사유 {당초 3개 사업 중 1개 사업 폐기}

- 미추진 사업명 : 대상포진 예방접종 사업
- 미추진 사유
 - 예산 투입 대비 효과성 낮음
 - 백신 접종 후 항체생성률 50~60%로 효과가 낮고, 장기간 추적 관찰한 데이터가 없어 안전성 검증 자료 불충분
 - 조기 치료시 후유증 없이 완치 가능한 질환이며, 치료시 약제비에 (5~10만원, 치료기간 1주일) 비해, 고가의 백신 접종은 비효율적
 - 대상포진은 감염성 질환이 아니며, 법정감염에 미포함되어 국가에서도 필수 예방접종으로 지원해주는 항목이 아님 (국가나 지자체에서 지원하여야 할 의무접종대상 아님)
 -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필수예방접종)에 따라 감염병 예방을 위한 접종이 필요한 질병에 대해 국가예방접종사업을 추진 중에 있음

- 전문가 자문 회의 의견수렴 결과에 따라 도지사 공약사업 추진 재검토, 중앙정부의 예방접종 무료지원 도입 시까지 보류

■ 찬반 투표 결과 및 최종 투표 결과

분임 찬반 투표 결과				전체 투표결과			
	찬성	반대	기권	승인	미승인	기권	참여자
1차 조사	3	1	0	16	7	0	23
2차 조사	2	2	0				

■ 찬성의견

- 대상포진 예방접종의 효과가 적고 예산이 많이 소요되므로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함. 440억원 이상이 소요되는 것에 비해 효과성이 낮아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봄.
- 치료비가 5~10만원 드는데 접종비용이 12~13만원 드는 상황에서 예방접종을 전체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것은 효과적이지 않음.
- 지금이라도 문제점을 인정하고 고쳐나가려 하는 것은 긍정적이라고 보아야 할 것임.

■ 반대의견

- 대상포진 백신의 항체형성률 50% 내외라고 하는데, 법정감염병은 아니지만 개개인에게는 매우 고통스럽고 두려운 질병임.
- 효과에 대해서 미리 검증하고 공약을 했어야지, 당선 이후 효과성이 떨어진다고 해서 폐기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봄.
- 대상포진 무료접종 내용을 폐기할 것이 아니라 노인복지를 위한 다른 공약으로 변경하든지 하는 것이 옳다고 봄.

■ 기타의견

- 없음

■ 최종결론

- 분임토의 1, 2차 투표 결과 조정안에 배심원 중에서 2명이 찬성, 2명이 반대하였음.
- 전체 회의 투표 결과 16명이 찬성, 7명이 반대하여 조정안이 최종 통과 (승인)되었음.

공약 조정
심의

II-2-26-②

어르신센터 설치

■ 조정 심의요청 내역 : 예산·목표 변경

변경 전	○ (목표) 어르신센터 20개소 설치 ○ (예산) 13,578백만원
변경 후	○ (목표) 어르신센터 10개소 설치 ○ (예산) 6,818백만원

○ 조정사유

< 목표 변경 : (당초)20개소 ⇒ (변경)10개소 >

- 코로나19 유행으로 집단이용시설 설치에 대한 부담 발생
 - 금년 코로나19로 인해 치매인지검사, 치매예방교육 등 대면서비스를 중심으로 하는 어르신센터 설치 필요성이 약화된 실정*

*장기간 노인복지관 휴관에 따라 시설 내 어르신센터도 정상 운영 애로 발생

- 시군 수요 부족
 - 어르신센터 향후 시군 수요 조사 결과('20. 7월) 2개 시군 설치 희망
⇒ 2021년 고성군, 2022년 통영시
※ 어르신센터 설치 현황 : 6개소 운영(창원·진주·김해·양산·함안·하동), 1개소 설치 예정(창녕)
 - 시군 복지예산 증가에 대한 부담으로 사업 추진에 소극적
 - 노인인구가 적은 군부의 경우 센터 신규 설치 필요성이 시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아 당초 목표인 전시군 센터 설치에 대한 재검토 필요
- 설치 장소 부족
 - 어르신센터 주요 설치 장소인 노인복지관 보유 시군 부족 : 6개 시군(19개소)

※ 도내 노인복지관 현황 : 19개소(창원8, 진주3, 김해3, 양산2, 남해1, 하동1, 거창1)

- 기존 노인복지관의 경우도 여유 공간이 없어 설치 공간 확보에 애로
- 달성 가능한 현실적 목표 설정과 장기적 사업 추진
 - 2020년 현재 7개소 운영 + 2021~2022년 3개소(창원, 통영, 고성 설치 검토)
 - 2022. 6월까지 총 10개소 설치로 목표를 변경하고 시군 노인복지관 신설 등 신규 설치 사유 발생 시 추가 설치 및 기능 강화 등 장기적 사업 추진 필요

< 목표 변경(사업량 축소)에 따른 예산 변경 >

- (당초) 13,578백만원 ⇒ (변경) 6,818백만원 ※ 보조비율 도 50% 시군 50%

■ 찬반 투표 결과 및 최종 투표 결과

분임 찬반 투표 결과				전체 투표결과			
	찬성	반대	기권	승인	미승인	기권	참여자
1차 조사	2	2	0	17	6	9	23
2차 조사	2	2	0				

■ 찬성의견

- 각 시군에서 호응이 별로 없고, 이 센터를 대체할 수 있는 기관이나 프로그램이 많이 있으므로 무리해서 추진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봄. 치매 판정이 나면 치매관리체계로 관리하고, 돌봄 서비스는 수요를 이미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함.
- 센터가 잘 하고 있다는 평가가 많음. 하지만 무리해서 확대했을 때 좋은 서비스가 오히려 질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함. 앞으로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현 상황에서 어려움이 있음을 감안해야 함.

■ 반대의견

- 20개소 설치하는 시군별 1개소 이상 설치하겠다는 것인데, 각 시군별로 1개소씩은 설치해야 형평성이 있지 않겠나 생각함.

- 어르신종합돌봄서비스 같은 경우 전년 하반기 대비 올해 상반기 5배 수준으로 증가했음. 치매어르신 부양가족의 경우 돌봄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큼. 코로나19 상황을 이유로 드는데, 일시적인 상황을 이유로 정책목표를 축소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부당하다고 생각함.
- 유사 업무 시설들이 있으나 공공적 센터의 차별화된 기능이 있다고 봄.

■ 기타의견

- 없음

■ 최종결론

- 분임토의 1, 2차 투표 결과 조정안에 배심원 2명이 찬성, 2명이 반대하였음.
- 전체 회의 투표 결과 17명이 찬성, 6명이 반대하여 조정안이 최종 통과(승인)되었음.

마. 5분임

공약 조정 심의	II-1-21-②	경남'맘 편한'원스톱 보육센터 설치
-------------	-----------	---------------------

■ 조정 심의요청 내역 : 예산·목표 변경

변경 전	○ 맘 편한'원스톱 보육센터 5개소 설치 ○ 예산계획('19~'22년) : 7,015백만원
변경 후	○ 맘 편한'원스톱 보육센터 2개소 설치 ○ 예산계획('19~'20년) : 4,315백만원

○ 조정사유

- 과도한 사업비 부담으로 일선 시군의 소극적인 사업추진 및 의지 부족
- 행정안전부 저출산 대응 공모사업 선정의 불확실성으로 우리 도 사업 추진 여부 불투명
- 시범보육센터 성과 분석 및 타당성 검토 후 장기적으로 확대 여부 결정

■ 찬반 투표 결과 및 최종 투표 결과

분임 찬반 투표 결과				전체 투표결과			
	찬성	반대	기권	승인	미승인	기권	참여자
1차 조사	5	0	0	19	3	1	23
2차 조사	5	0	0				

■ 찬성의견

- 어린이집 확충 개수는 줄었지만 공공보육 이용률 40% 달성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어서 찬성한다. 또한 해마다 인구 감소로 어린이집이 200여개 줄어들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서 목표를 조정해야 한다고 본다.
- 국공립어린이집과 가정보육 어린이집에 가보니, 운영에 애로점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현실을 반영하여 국공립 어린이집이나 민간 어린이집이나 이용에 별 차이가 없고, 행정기관에서 지원하는 내용이 유사하므로 목표를 줄이는 것에 찬성한다.

- 해마다 많은 어린이집이 줄어들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고, 2년전 공약 당시의 상황과 달라진 지금의 현실을 반영하여 국공립어린이집 목표 축소를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 반대의견

- 없음

■ 기타의견

- 사회 환경의 변화를 고려하여 공약 수정 및 조정을 통하여 공약을 이행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 최종결론

- 분임토의 1, 2차 투표 결과 조정안에 배심원 5명이 전원 찬성하였음.
- 전체 회의 투표 결과 19명이 찬성, 3명이 반대하여 조정안이 최종 통과(승인)되었음.

공약 조정
심의

II-1-21-③

경남 공공산후조리원 권역별 설치

■ 조정 심의요청 내역 : 목표 변경

변경 전	○ 공공산후조리원 권역별 3개소 설치
변경 후	○ 공공산후조리원 권역별 1개소 설치

○ 조정사유

- 지속적인 신생아수 감소와 이용료 감면에 따른 적자 보전을 위한 추가예산 필요 및 시군 의지 부족
 - 경남 출생아 수 : 2018년 21,224명 → 2019년 19,250명(9.3% 감소)
- 공공산후조리원 1개소 운영의 타당성 검토 후 권역별 확대 필요성 제기

■ 찬반 투표 결과 및 최종 투표 결과

분임 찬반 투표 결과				전체 투표결과			
	찬성	반대	기권	승인	미승인	기권	참여자
1차 조사	3	2	0	14	8	1	23
2차 조사	3	2	0				

■ 찬성의견

- 도지사 공약이 아닌데 공약으로 들어갔다고 본다. 민간 산후조리원이 도내에 27개소가 있고, 출산 후 조리는 도민이 자비로 해야 할 영역이라고 본다.
- 군 단위의 출생률이 낮은 상황을 고려하여, 공공산후조리원 설치보다는 산모 직접 지원이나 다른 지원 방안을 찾는 것이 예산 등의 측면에서 효율성이 있다고 본다.
- 신축 설치보다는 운영방안을 찾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본다. 운영비가

더 들어가는 현실을 고려하여 설치예산을 줄이고, 다른 방안을 찾는 것이 더 필요하다.

■ 반대의견

- 서울이나 경기도의 인구가 많은 지역의 경우에는 산후조리원이 더 많다고 이해되지만, 밀양시의 경우 아예 공공산후조리원이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최소한도로 설치, 운영이 필요하다고 본다.
- 원래 계획했던 권역별 3개소 설치도 적은 편이다. 시설 규모를 줄여서라도 설치하고, 작은 규모로 만들고 다른 지역에서 인력을 파견해서라도 운영해야 한다. 운영 지원도 70%가 아니라 이런 사업일수록 국비 또는 도비 100% 지원이 필요하다.

■ 기타의견

- 공공산후조리원 신규 설치, 운영보다는 산모에게 직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을 더 개발할 필요가 있다.

■ 최종결론

- 분임토의 1, 2차 투표 결과 조정안에 배심원 3명이 찬성, 2명이 반대하였음.
- 전체 회의 투표 결과 14명이 찬성, 8명이 반대, 1명이 기권하여 조정안이 최종 통과(승인)되었음.

공약 조정
심의

II-1-21-④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 조정 심의요청 내역 : 예산·목표 변경

변경 전	○ '21년까지 국공립 어린이집 358개소 확충으로 국공립 이용률 40% 달성 ○ 예산계획('18~'21년) : 76,286백만원
변경 후	○ '<u>22년까지</u> 국공립 어린이집 <u>275개소</u> 확충으로 <u>공공보육*</u> 이용률 40% 달성 * 공공보육 : 국공립 + 사회복지법인 + 직장 어린이집 ○ 예산계획('18~'22년) : 51,726백만원

○ 조정사유

- 정책 시행 당시와 현재('20.8월말) 보육여건 변화
 - '18년 대비 어린이집 수 16.2%, 재원 아동 수 9.9% 감소
 - 어린이집 ('18.3월) 3,065개소 ('20.8월) 2,568개소 → 497개소 감소(16.2%)
 - 재원 수 ('18.3월) 91,345명 ('20.8월) 82,270명 → 9,075명 감소(9.9%)
 - 매년 영유아 수 감소 ⇨ 대상기간 동안 22.6% 감소 추정
 - ('18년말) 199,210명 ('20년말 추계) 177,544명 ('22년말 추계) 154,166명
 - 아동 1천명 당 어린이집은 14.6개소로(전국 3위) 과잉(전국평균 13.6개소)
 - 만0-6세 아동수 175,625명, 어린이집 수 2,568개
- ⇒ 시행당시와 만료시점의 보육수요 변화 등 시대적 여건 반영 필요
- 장기임차 국공립 전환 선정률 저조
 - 장기임차는 보건복지부의 물량배정 및 선정심사에 의해서만 확충 가능
 - 도의 추진의지 및 요건 충족만으로 확충하기에는 한계
 - 적극 수요 발굴·검증 후 복지부에 신청하나, 기존 운영자에게 운영권 보장됨에 따라 엄격한 검증 및 무분별한 전환 지양으로 최종 선정률 저조

- ('19년) 신청(20), 선정(14) * 우리도 선정률 70%, 전국평균 70%
 - ('20년) 신청(30), 선정(8) * 우리도 선정률 27%, 전국평균 21%
 - 실적 위주 확충 지양, 민간과 상생하는 방향으로 추진
 - 민간상생 및 지역적 보육수요 고려, 효율적·균형적 설치
 - 실적 위주의 무리한 국공립 확충은 경쟁력 있는 민간 어린이집의 운영에 지장을 줄 수 있어 보육수요, 지역적 여건 등 다각도로 검토 후 설치
 - 보건복지부의 국정과제 변경 동향
 - '21년까지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 40% 보장
- ⇒ (변경 안) '22년까지 공공보육 이용률40% 달성
- '21년까지 국공립 이용률 40% 달성에 무리가 있음을 판단함

■ 찬반 투표 결과 및 최종 투표 결과

분임 찬반 투표 결과				전체 투표결과			
	찬성	반대	기권	승인	미승인	기권	참여자
1차 조사	5	0	0	19	3	1	23
2차 조사	5	0	0				

■ 찬성의견

- 어린이집 확충 개수는 줄었지만 공공보육 이용률 40% 달성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어서 찬성한다. 또한 해마다 인구 감소로 어린이집이 100여개 줄어들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서 목표를 조정해야 한다고 본다.
- 국공립어린이집과 가정보육 어린이집에 가보니, 운영에 애로점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현실을 반영하여 국공립 어린이집이나 민간 어린이집이나 이용에 별 차이가 없고, 행정기관에서 지원하는 내용이 유사하므로 목표를 줄이는 것에 찬성한다.
- 해마다 많은 어린이집이 줄어들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고, 2년전 공약

당시의 상황과 달라진 지금의 현실을 반영하여 국공립어린이집 목표 축소를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 반대의견

- 없음

■ 기타의견

- 사회 환경의 변화를 고려하여 공약 수정 및 조정을 통하여 공약을 이행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 최종결론

- 분임토의 1, 2차 투표 결과 조정안에 배심원 5명이 전원 찬성하였음.
- 전체 회의 투표 결과 19명이 찬성, 3명이 반대하여 조정안이 최종 통과 (승인)되었음.

제4장

도민공약평가단 활동 후기

제4장 도민공약평가단 활동 후기

분임별 소감나누기

- 회의를 마치고 진행된 ‘소감나누기’에서 제시된 의견임.

2차 회의 후 소감나누기

위원1 질의응답 자리이기 한데, 공격과 방어하는 느낌이 들었다. 애초에 공약이 변경되는 사업보다는 공약 자체에 대한 질문이 더욱 많았던 것 같다. 당초에 구체적이었으면 굳이 조정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 당초 안이 모호한 것들이 아쉬웠다.

위원2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어서 좋았다.

위원3 질문 하면서 해소된 부분도 있고, 선출직 공직자가 출마할때에 부족했던 상황을 고려하면 조정 할 수는 있다고 생각한다. 구체적으로 아는 계기가 되었다.

위원4 재밌기도 하면서 중간에 화도 나기도 했다. 공약사항 달성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지만, 짚어 보는 것에 의미를 두겠다.

위원5 하면 할수록 책임감이 막중하다는 느낌이 든다. 좀 더 면밀히 심의해야겠다는 느낌이 들었다. 도정뿐만 아니라 시정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듯하다. 항상 시민이 감시해야 할 듯하다. 직접 행정에 참여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위원5 추진 과정을 지켜보면서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날카로운 질문을 공유할 수 있어서 좋았다.

3차 회의 후 소감나누기

위원1 아쉽다는 생각이 많이 든다. 충분한 정보제공이 이루어졌다면 조금 더 세세하게 토의할 수 있을 듯하다. 회차를 거듭할수록 공약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기 때문에 좀더 판단하기 좋은 정보제공이 필요해 보인다.

위원2 정보제공이 미흡했다. 좀 더 세세하게 향후 당초계획과 조정안에 대한 자료와 설명이 필요하다.

위원3 단순한 요식행위를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긴 했지만, 그래도 공약 사항에 대해 알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위원4 짧지만 도정에 대해 검토 해볼 수 있어서 좋았다. 도민평가단이라고 하지만 도정에 대한 평가도 아니고, 도지사의 공약에 대한 일부분에 조정안에 대한 한계성이 아쉬웠다. 도의 여러 사항에 좀 더 많이 알고 싶었다.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지방자치는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을 지방 선거를 통하여 선출하고 선출된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는 서로 협의하고 논의하여 지역 특성에 맞게 지방자치정책, 지방자치예산을 수립하고 이를 실행하는 것을 의미한다(안성호, 2018).

특히, 4차 산업혁명이라 지칭되는 자동화 로봇화 등 기술의 혁명적 진보로 인해 노동의 투입감소율이 자본의 투입감소율보다 큰 형태의 노동절약형 기술 진보(labor saving technical progress)가 사회양극화를 확대하고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산업구조 재편 과정에서 '노동친화적 기술 진보'로 정책 선회는 21세기 지방정부의 커다란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그러나 권위주의에 기반한 지역 간 획일성에 더 익숙한 우리사회의 역사·문화적 경험은 지방자치 확대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으며, 지방민주주의라는 측면에서 보았을 때 지역의 다양화 및 시민들의 자기실현(self-actualization)을 보장하는 데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인하여, 민선7기 체제에 접어들면서 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제안으로 실시되는 공약실천계획서 작성과 공개 및 조정공약 적정 여부 심의와 공약 이행 과정에 대한 평가는 복잡하고 과편화된 시민들이 자유롭게 자신들의 의사를 표현하고 협력하는 '공동창조자(cocreator)로 참여하는 통로를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제안하는 '지방정부 3.0'은 협력(collaboration)과 국가(nation)의 합성어인 콜라보네이션(Collabonation)이다. 이는 더 이상 국가, 시장, 시민으로 대표되는 사회 주체 중 어느 하나의 주도로 현대사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하고자 한 것이다. 또한 이는 여러 분야의 전문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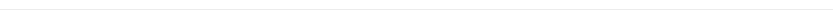
경험을 소유한 다양한 주체들의 협력적 노력(concerted)과 정책공동체(policy community) 심화 등에 대한 제안이다.

사회학자 제임스 슈로비키(James Surowiecki)는 그의 저서 '군중의 지혜(The Wisdom of Crowds)'를 통해 그룹은 개인보다 신뢰성이 높고, 의견을 수렴하는 속도가 빠르며, '조정(Coordination)'과 '협동(Cooperation)' 능력이 있다고 주장한다. 21세기 지방행정에서 직접민주주의와 거버넌스는 시민들의 삶을 중심에 놓고 시민이 체감하는 정책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여 정책의 불일치(不一致)를 보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인구비례에 의하여 선발된 도민공약평가단 운영은 공약 이행 점검 과정에서 민주적인 정당성 확보와 함께 기술의 혁명적 진보에 의한 산업구조 재편, 인구구조 변화, 내외 여건 변화 등에 따른 사업비 조정, 목표 변경, 사업기간 재설정 등의 안전에 대한 결론을 합리적으로 도출하였다는 측면에서 커다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지방자치의 공공성과 지역 구성원들이 추구하는 가치(Value), 그리고 철학(Philosophy)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도민공약평가단의 운영은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는 필요충분조건을 충족시켜가는 과정이었다. 주민들의 지역과 행정에 대한 관심 제고와 타인에 대한 배려 및 다양성 존중 등은 경상남도의 발전에 소중한 경험이 될 것이다.

부록



1. 1차 회의 교육자료

1차 회의 교육자료

매니페스토 운동과 경상남도 도민공약평가단

2020. 10. 20.

Manifesto
●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류일환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정책자문위원

Manifesto
●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목 차

I. 민주주의에 대한 의미 재정립

II. 매니페스토운동과 민주주의

III. 숙의민주주의와 도민공약평가단

IV. 도민공약평가단 운영의 개요

I. 민주주의에 대한 의미 재정립

민주주의

권력과 권한, 민주적 통제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I. 민주주의에 대한 의미 재정립

선거공약

임기 4년의
고용계약서



Manifesto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4

II. 매니페스토운동과 민주주의

매니페스토의 어원

- 라틴어의 마니페스투스(manifestus)에서 유래 : '증거' 또는 '증거물'이라는 의미로 쓰임
- 이탈리아어의 마니페스토(manifesto) : 과거 행적을 설명하고, 미래 행동의 동기를 밝히는 공적인 선언

1834년 영국 보수당 당수 로버트 필(Robert Peel)

- 영국 탐워스(Tamworth) 지방선거에서 "더 이상 표를 얻기 위한 거짓말을 하지 않겠다"는 보수당 당수 로버트 필의 선언에서 시작된 선거공약집

1997년 영국 노동당 토니 블레어 (Tony Blair)

- 1997년 토니 블레어의 노동당 매니페스토는 당시 나이 마흔넷이었던 토니 블레어를 수상에 올리면서 매니페스토의 대명사가 됨



Manifesto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5

2006년 한국형 매니페스토운동 시작

- 2006년 5월 31일 지방선거를 계기로 후보자들이 내세운 공약이 구체성을 띠고 있으며 실현가능한지 곧 '갯준공약'인지의 여부를 평가하자는 매니페스토운동이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전개
- 영국과 일본의 경우 매니페스토 운동에 정당이 선도적, 혹은 주요한 역할을 수행하였으나 한국은 유권자 및 시민사회의 주도적 역할이 중요하였음

매니페스토 주요 활동

- 유권자 핵심의제 공개
- 공약 분석 및 평가, 매니페스토 약속운동 전개
-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
-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 기초자치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
- 단체장 공약이행 평가를 위한 주민배심원제



막연한 약속 vs 구체적 약속
소수만 알도록 vs 모두가 알도록
말로만 선언 vs 문서로 선언

II. 매니페스토운동과 민주주의

- 철학과 시대소명에 따른 선택과 집중 : 도전과 열정, 영혼이 깃든 책임공약
- 실행원칙과 그에 따른 우선순위 : 이것도 저것도 하겠다는 공약이 아닌 이것만은 꼭!
- 핵심과제와 자원조달방안 : 왜(why), 무엇을(what), 어떻게(how) 할 것인지
- 세부실천과제 : 핵심과제와 실행원칙, 그에 따른 우선순위를 도표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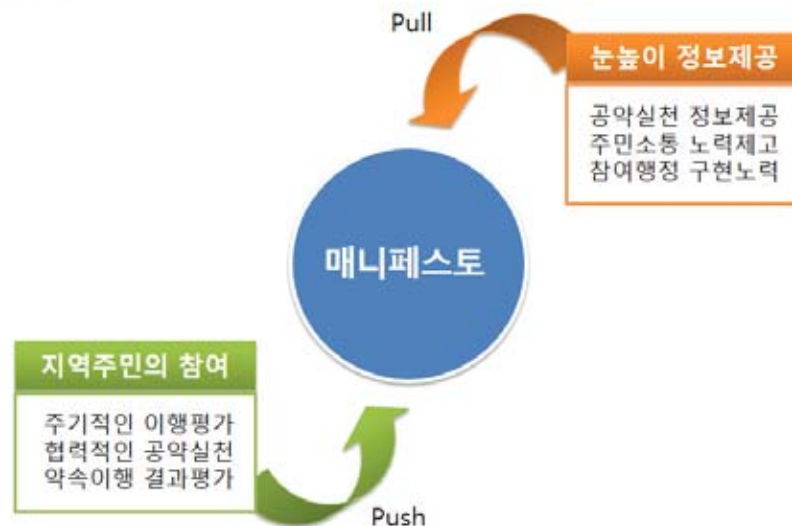


Manifesto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8

II. 매니페스토운동과 민주주의

실천과 검증



Manifesto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9

Ⅲ. 숙의민주주의와 도민공약평가단

반쪽 짜리 엘리트 민주주의, 비정상 민주주의를 넘어

불가능해.
누가 오겠어?

주민들이
뭘 알겠어?

신분상습의 상징 '국회직필' 특권(200여개)

월평균 월급 941만원(연봉 1억 1300만원)

- 헌법작성: 120만원, 지방(2명) 100만원
- 기본법(헌법)에 제정하는 법안수입: 500만원
- 개별 지급되는 입법활동비(100만원)
- 기획처장비(100만원), 관리업무수당(100만원)
- 특별활동비+상여금+정근수당+월급 휴가비+연간 1144만원
- 국회의원회관내 사무실 세공, 의원활동지원 보좌진 6명 제공
- KTX 및 국유철도의 선역, 항공기 무료 사용
- 회기 중 한월만 제외하고 불체포특권
- 후원회 조직 매년 1억5000만원까지 정치자금 모금



국회/국회 의원



한국에너지패스트실천본부

10

Ⅲ. 숙의민주주의와 도민공약평가단

숙의민주주의 국내 사례

인구대표성,
민주성,
판단의 공정성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신고리 5-6호기 100MW 원자로 건설사업에
관련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위원회 구성

위원장: 김민석

위원: 김민석, 김민석, 김민석

위원: 김민석, 김민석, 김민석

위원: 김민석, 김민석, 김민석

위원: 김민석, 김민석, 김민석

위원: 김민석, 김민석, 김민석

위원: 김민석, 김민석, 김민석

위원: 김민석, 김민석, 김민석

위원: 김민석, 김민석, 김민석

위원: 김민석, 김민석, 김민석

위원: 김민석, 김민석, 김민석

위원: 김민석, 김민석, 김민석

위원: 김민석, 김민석, 김민석

위원: 김민석, 김민석, 김민석

위원: 김민석, 김민석, 김민석

위원: 김민석, 김민석, 김민석

위원: 김민석, 김민석, 김민석

위원: 김민석, 김민석, 김민석

위원: 김민석, 김민석, 김민석

위원: 김민석, 김민석, 김민석

위원: 김민석, 김민석, 김민석

위원: 김민석, 김민석, 김민석

위원: 김민석, 김민석, 김민석

위원: 김민석, 김민석, 김민석

위원: 김민석, 김민석, 김민석

위원: 김민석, 김민석, 김민석

위원: 김민석, 김민석, 김민석

위원: 김민석, 김민석, 김민석

위원: 김민석, 김민석, 김민석

위원: 김민석, 김민석, 김민석

위원: 김민석, 김민석, 김민석

위원: 김민석, 김민석, 김민석

위원: 김민석, 김민석, 김민석

위원: 김민석, 김민석, 김민석

위원: 김민석, 김민석, 김민석

위원: 김민석, 김민석, 김민석

위원: 김민석, 김민석, 김민석

위원: 김민석, 김민석, 김민석

위원: 김민석, 김민석, 김민석

시민참여단의 공론화 과정 소감

"학교 졸업 뒤 이런 토론 처음...기성세대와 청년 모두 공감할 수 있는 자리"

김정숙 (67·여)

"한자재 분야에서 일했는데 일반 시민들의 질문 수준이 전문가 뺄 정도로 높아 깜짝 놀랐다"

차민경 (83·남)

"의미있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어떤 질문이 나오든 수용할 수 있다"

조현영 (39·남)

"보통 공청회는 아수라장이 되기 일쑤인데 이번엔 대화를 통해 많은 걸 배웠고 생각도 바뀌었다"

김영희 (52·남)

"편파적인 부분이 없었고 민주적으로 진행됐다. 공론화 의미가 맞지 않길 바란다"

김경애 (82·여)

- 시민대표 500명 중 471명 합숙
- 야유 냉소 없이 양쪽 의견 경청



한국에너지패스트실천본부

11

Ⅲ. 숙의민주주의와 도민공약평가단

숙의민주주의 해외 사례

-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洲) 정부는 지난 2004년 무작위 추첨으로 선발된 일반 시민들로 '브리티시 컬럼비아 시민의회(BCCA : British Columbia Citizens' Assembly)'를 구성
- 시민의회는 주의원을 선출하는 선거법안을 작성하는 권한을 부여받았고, 11개월 동안의 토론 과정을 거쳐 새로운 선거제도를 확정하고 주민투표에 회부



Ⅲ. 숙의민주주의와 도민공약평가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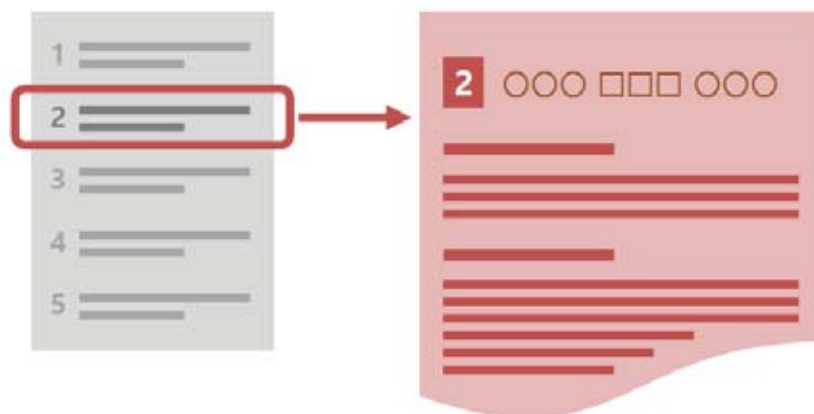
대한민국 듣기평가 : 무엇이 문제일까요?



건전한 소통의 기반, 사실(Fact)



공약실천계획서



IV. 도민공약평가단 운영의 개요

“민선7기 도정 사용설명서”



IV. 도민공약평가단 운영의 개요

도민공약평가단 운영의 목적과 의의



IV. 도민공약평가단 운영의 개요

회의 개요

회의일정 : 2020년 10월 20일(화), 11월 3일(화), 11월 17일(화)

대 상 : 경상남도 거주 만 18세 이상 주민

선발인원 : 도민공약평가단 45명

구성방법 : 성별·연령·지역을 고려한 무작위 선발

주최·주관 : 경상남도·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심의범위 : 공약 조정 적정여부 심의



IV. 도민공약평가단 운영의 개요

추진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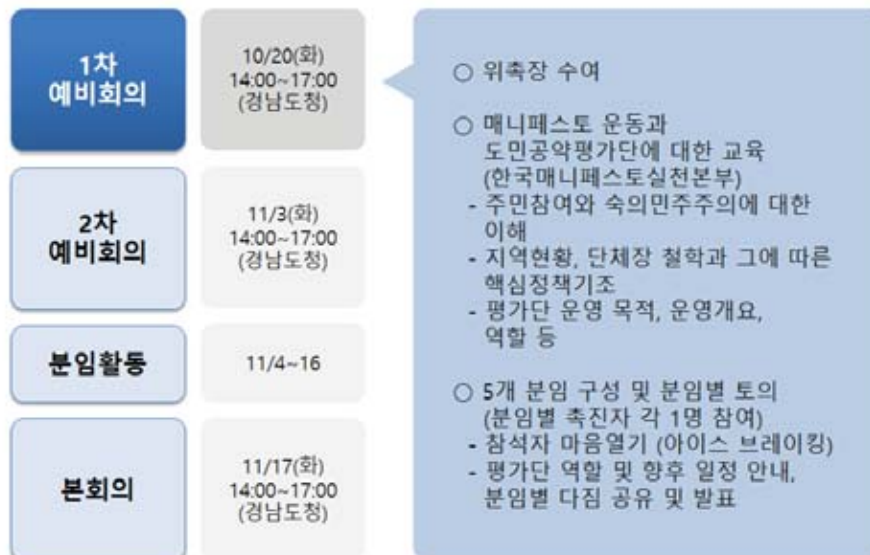
- 민주적이고 공정한 심의를 위해 지역별·성별·연령별 인구비례에 따른 무작위 추첨으로 선발하여 주민대표성과 참여기회의 평등성 확보
 - ① (1차) ARS(음성 응답 시스템)로 평가단 참여 의향을 밝힌 470명의 도민공약평가단 모집, (2차) 470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을 통해 최종 45명 선발
 - ② 2차 전화면접을 통하여 단체장과 친인척관계에 있거나 전현직 선출직공직자이거나 또는 현재 공무원 및 정당의 주요당직자로 근무 중에 있는 주민은 선발대상에 제외
 - ※ 1, 2차 예비회의에 불참한 평가단은 이후 도민공약평가단 회의에 참여할 수 없음을 원칙
- 최종 선발을 통하여 회의에 참여하는 평가단은 주민의 대표성을 갖고, 경상남도의 공약 조정에 대한 최종 승인여부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 부여
- 기존의 여론조사 방식이 아닌 학습과 토론을 통한 신중한 의사결정과 선호변경이 가능한 공론조사 방식의 토의 과정 채택
- 지자체 공약담당자는 심의 및 평가 안건(정책공약)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
- 운영관리에 있어 모든 절차는 민주적 절차에 의하며 도민공약평가단 스스로 운영하여 나가도록 유도
- 원활한 토의 진행을 돕기 위하여 분임별 촉진자(facilitator)도 함께 참여, 촉진자는 현장실무경험과 전문성이 있는 시민사회 활동가로 구성
- 도민공약평가단 논의 결과와 지자체의 수용 여부는 일정기간 지자체 홈페이지에 공시

IV. 도민공약평가단 운영의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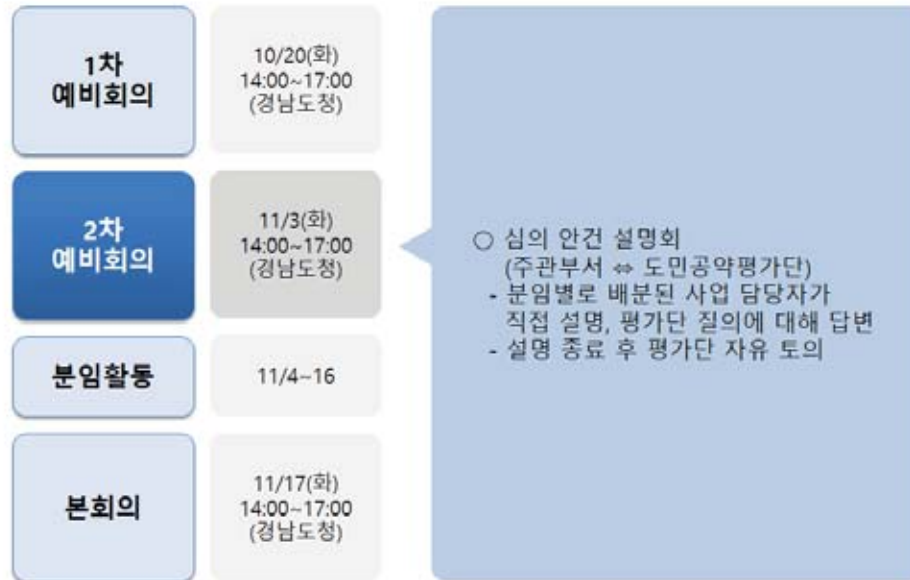
도민공약평가단 운영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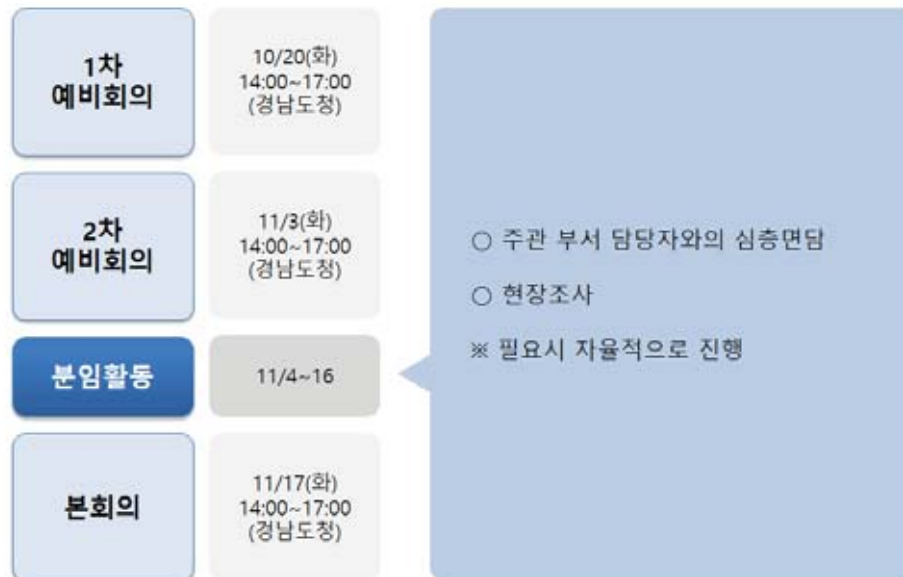
IV. 도민공약평가단 운영의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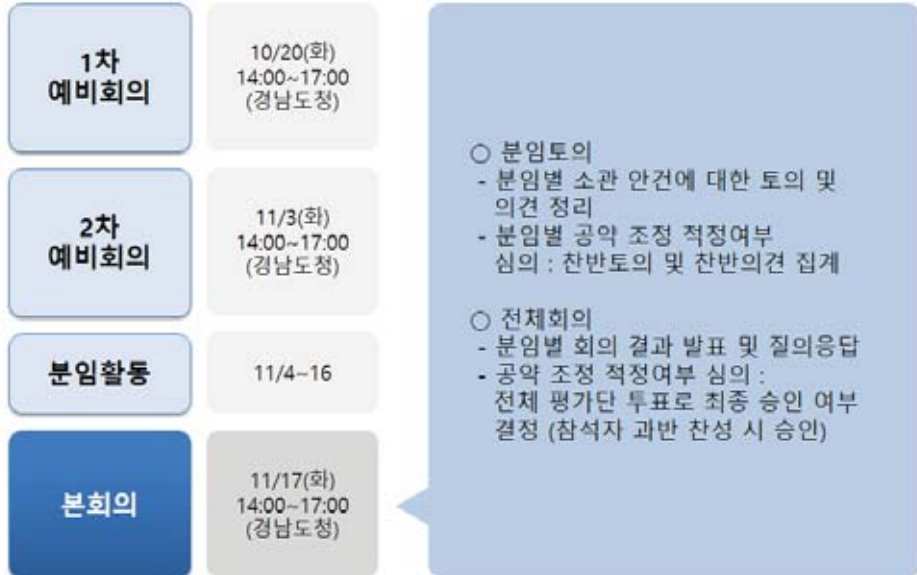
IV. 도민공약평가단 운영의 개요



IV. 도민공약평가단 운영의 개요



IV. 도민공약평가단 운영의 개요



에필로그

코로나19 시대를 건너며



“지금과 같은 위기의 시대에 우리는 중요한 선택에 직면”
 “전체주의적 감시체제와 시민의 역량 강화 사이에서의 선택”
 “**시민의 역량 강화**를 통해 건강을 지키고 코로나바이러스를 막는 길 가능”
 “**폭넓은 테스트와 투명한 정보공개** 그리고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
 “사람들에게 과학적 사실을 알려주고, 사람들이 정부를 믿을 때”
 “**필요성을 알고 정보를 가진 시민들은 감시 받는 대중보다 강력하고 효율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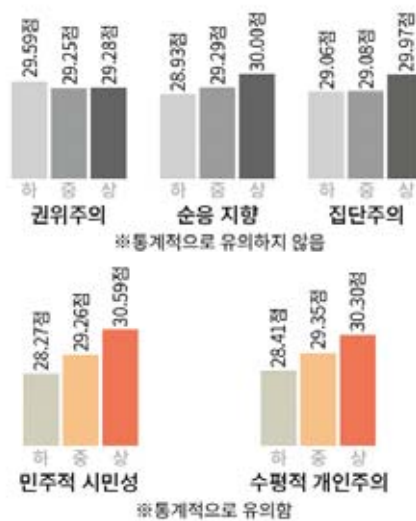
「코로나바이러스 이후의 세계」
 (유발 하라리, 《파이낸셜타임즈》, 2020년 3월 20일)



어떤 성향의 사람들이
 방역에 더 적극적이었는가?



「코로나19가 드러낸 한국인의 세계」-〈시사IN〉, KBS 공동 기획
 [대규모 웹조사]
 〈시사IN〉 663호, 2020년 6월 2일



에필로그

‘잔인한 바이러스’가 드러낸 우리사회의 ‘약한 고리’



에필로그

시민, 민주주의, 그리고 공동체



감사합니다



2. 3차 회의 교육자료

3차 (본회의)

경상남도 도민공약평가단 본회의 진행 설명

2020. 11. 17.

Manifesto
한국메니페스토실천본부



Manifesto
한국메니페스토실천본부

국회 입법과정과 입법 절차



- ① 제안
- ② 회부
- ③ 상임위원회 심사
- ④ 법제사법위원회 내용·체계·자구 심사
- ⑤ 전원위원회
- ⑥ 본회의 심의·의결
- ⑦ 정부 이송
- ⑧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 ⑨ 공포

도민공약평가단 회의 진행과정과 절차



도민공약평가단의 권한 범위와 역할



전체 주민의 직접 투표로 선출직 공직자 선거, 공약 선택
무작위 추첨으로 구성된 평가단이 이행 상황 점검 및 공약실천계획에 대한 권고안 제시

본회의, 평가단의 태도 (자세)

- 경청**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듣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 존중** 다른 사람이 충분히 말할 수 있도록 존중해 줍니다
- 신뢰** 활동과정에서 들은 중요한 비밀은 다른 이들에게 전하지 않습니다



본회의, 평가단의 태도 (마음가짐)

우리는 주민을 대표해 공약 이행을 점검하고 조정 적정여부를 심의하는 평가단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내리는 결정은 경상남도를 위한 매우 중요한 권고사안입니다.
선입견을 내려 놓고 자신의 이해도 중요하지만 지역의 공공성도 함께 고려해 주십시오.



본회의,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공공성과 현재여건을 고려하여 공약 조정에 대한 적정여부를 심의해 주십시오.
엄정한 재판관의 입장에서 경상남도 전체의 공공성에 기반해 판단해 주십시오.



본회의, 어떻게 진행되는가

국회 소위 및 본회의 진행방식

분임토의 후 분임별 토의 결과를 전체회의에서 보고
분임별 투표 결과를 두고 평가단 전체 투표로 최종 승인여부 결정

① 분임토의 : 분임별 안건 토의 (120분)

- 공약 조정 적정여부 심의

② 전체회의 및 투표 (60분)

분임별 결과 발표 및 질의응답 (각 10분)

- 분임별 분임장 토의결과 보고 및 질의응답 (토의결과 보고 7분, 질의응답 3분)
- 조정 심의 안건의 경우, 분임 미승인 안건에 대해 공약사업담당자 소명 기회 부여 (1분)

전체 도민공약평가단 투표

- 조정 심의 안건은 분임 안건에 대한 전체 평가단 투표로 최종 승인 여부 결정 (참석자 과반 찬성)

감사합니다

민선7기 공약이행점검을 위한

2020 경상남도 도민공약평가단 회의 운영 결과 보고서

발행일 2020년 12월

발행처 경상남도

제 작 경상남도

집 필 (사)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